



인터넷과 환경관리권력*

박승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컴퓨터에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거쳐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매개적 환경 구성은 현대에 이르러 점차 그 존재를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배경을 이루고 있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가 상시적이고 잠재적인 매개 환경을 열어젖혔다면,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처리·활용할 수 있는 투명성의 환경을 구축했고, 빅데이터는 집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 및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사물들 스스로 우연성의 요소들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로 매개적 환경의 일상화이자 편재화이며, 그러한 환경에의 불가피성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터넷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매개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통치의 자동화가 일상적인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매개적 환경 구성과 이를 통한 관리 및 통제의 메커니즘을 특유한 권력의 효과 및 이와 결부된 합리성의 체계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을 개념 안에 담아 '환경관리권력'이라고 명명하고자 했다. 일상을 둘러싼 현대적 매개 환경은 개별 주체의 내면에 작동하던 권력의 주체화/예속화 과정과는 달리, 단지 환경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그 환경에 속한 인구 일반의 사고와 행

* 이 논문은 저자의 2017년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psi4x@hanmail.net

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더 없이 효과적인 권력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매개 안에 있음의 환경 속에서 점차 주체의 자리와 역할이 자동화된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현실은, 결국 권력의 현실적인 작동 매커니즘이 그러한 형태와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KEYWORDS 통치성, 환경관리권력, 매개 안에 있음, 미셀 푸코, 관리사회, 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1. Y2K라는 문제설정(problematics)

1999년 12월 31일, 마치 묵시록(apocalypse)의 그날(the Day)이 도래한 것처럼 천년의 마지막 날은 열광과 환호로 그리고 그만큼의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열광’과 ‘불안’이야말로 당시의 상황이 집약된 감정 표현일 텐데, 이 순간 인류는 살아서는 결코 서 보지 못한 역사의 분기점에, 그것도 한 세기가 아닌 그 열배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의 문턱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전무후무한 경험은 열광과 불안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만큼이나 상반되고 혼재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기에 충분했다. 그 한 편에 전쟁과 냉전으로 얼룩진 극단의 20세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는 불확실하고 불가지한 시간 속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다양한 반응들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고 또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러한 모순된 반응 중에서도 특히 후자와 같은 감정들을 인위적으로 촉발해 낸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1999년의 12월은 단지 세기말적 분위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불안과 혼란의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었다. 대충 기사의 제목만 나열해 보아도, “세기말 공포”, “설마는 없다. 지구촌 총비상”, “대재앙 막아라”, “비상경계 태세 돌입”, “원전 중단 등 우려”, “통신-금융체계 마비”, “최대 위험은 투자자 불안 심리”, “밀레니엄 테러 비상”, “공항·병원 대책 비상” 등, 언뜻 보면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를 연상케 할 정도이다(고현석, 1999; 윤구현, 1999). 더욱이 기사 본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비상, 파국, 붕괴, 공황, 재난, 폭발, 공포, 종말 등의 현기증 나는 표현들은 밀레니엄이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모종의 긴급한 위기 상황과 곧장 연결시키면서 이로부

터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촉발 및 확대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단언컨대, 당시의 불안과 혼란은 역사의 거대한 전환을 직접 경험하는 데서 비롯된 순전히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그때의 불안과 혼란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세기말적 증상에 가까웠을 것이다. 하지만 1999년 12월의 감정 변용은 자연적인 것이기보다는 인위적인 것이었으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지역적이기보다는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심지어 전쟁에 비견될 만큼 파국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었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밀레니엄이라는 역사적 전환을 임박한 종말의 시간과 중첩시키면서 전 세계를 불안의 끝자락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Y2K(Year 2 Kilo)'였다(Gere, 2009).

흔히 알려진 것처럼 Y2K의 시작점은 컴퓨터 개발 단계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업용 컴퓨터가 개발된 1950년대에는 컴퓨터 저장 능력이 그야말로 기초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도를 두 자리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1월 1일을 01/01/00으로 표기하는 식이다(최영재, 1999; Y2K, *n.d.*).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표기법은 2000년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Y2K 문제(Y2K bug)', '밀레니엄 버그(Millennium Bug)', '2000년 문제(Year 2000 bug)' 등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 공통의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른다(Y2K bug, *n.d.*).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컴퓨터가 00을 2000년이 아닌 1900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정보통신부, 2000; Y2K, *n.d.*). 컴퓨터가 2000년을 01/01/00으로 표기함으로써 1900년과 2000년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계산상의 오류, 데이터 정렬상의 오류, 날짜 표시의 오류, 날짜 기록상의 오류, 날짜 사용상의 오류, 연계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상의 오류 등"(최진탁, 1999, 325쪽)이 발생하면서 결국 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오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시간 제어 기능이 포함된 각종 전자 장치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선우종성 외, 1998). 즉 마이크로프로세스 칩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전자 기기가 문제의 잠재적인 발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Y2K는 그야말로 현대 기술 문명 전체를 그 사정거리로 삼고 있었다(Gere, 2009).

요컨대 Y2K를 통해 드러난 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의 문제가 단순히 몇몇 기계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그야말로 문명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어떠한 재난도 이처럼 전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Y2K에 대한 당시의 위기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적/비담론적인 실천들을 이끌어내고 불안이나 혼란과 같은 감정들을 촉발해 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Y2K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심지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만든,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dependent condition)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태의 핵심인데, Y2K가 그만큼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연도 인식 오류 그 자체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었던 환경과 조건, 곧 모든 컴퓨터가 상호 연결되고(네트워크화) 모든 데이터가 상호 운용되는(디지털화) 사회적·기술적 환경 조건이 이미 그에 앞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며(Castells, 1996/2003), 이로써 컴퓨터의 문제가 문명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선제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화와 디지털화의 필연적 전개, 그리고 이로 인한 매개 환경의 근본적인 재편이 먼저 전제된 다음에야 Y2K가 비로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재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컴퓨터 알고리즘의 문제가 모든 것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상상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조건이 관념적

으로 반영된 까닭이며, 다시 말하면 Y2K는 자체의 문제설정을 철저히 이러한 조건 위에서 그것에 부합하는 형태로만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Y2K는 어떻게 과거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즉 이 글의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시의 매개적 환경 구성에 대한 문제이다. 반복하지만, Y2K가 그토록 문제적이었던 이유는 단연 그것이 당시의 네트워크화되고 디지털화된 매개 환경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된 1970년대에는 아무런 파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적인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었던 것은, Y2K가 그만큼 문제적으로 진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매개적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했기 때문이었다. Y2K로 말미암아 우리는 네트워크화/디지털화된 매개 환경이 이미 선택 불가능한(또는 불가역적인) 일상의 환경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Y2K는 그것을 문제가 되게끔 만든 당시의 매개 환경을 질문의 한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현재와 미래의 매개 환경에 대한 물음이다. 당시의 매개 환경이란 결국 현재의 정보화 환경을 지탱하는 토대로 연장·확대·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Y2K를 둘러싼 쟁점들 또한 더 없이 현재적인 형태로, 심지어 더 극대화된 형태로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은, Y2K가 제기한 매개 환경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현재의 지평 속에 재맥락화한다. Y2K는 매개 환경 자체를 문제화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 상에서 현재의 매개 환경을 사유하도록,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조건인 현재를 특정한 환경 구성의 함수로 이해하도록 이끌어낸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 구성을 통해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Y2K는 컴퓨터의 바깥, 곧 컴퓨터가 정지된 세계란 결국

과국과도 같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첫 번째 쟁점대로) 컴퓨터에 의해 매개된 환경만이 유일무이한 세계로 남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임과 동시에, (두 번째 쟁점대로)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가능한 세계를 규정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이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능한/불가능한 세계를 열고 닫음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한계를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일상을 둘러싼 현대적 매개 환경은 개별 주체의 내면에 작동하던 권력의 주체화/예속화(subjectification) 과정과는 달리, 단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그 환경 안에 위치한 인구 일반의 사고와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또는 한계 짓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기반구조적 권력(infrastructure power)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Ingham, 2004/2011). 환경과 권력의 이 같은 문제설정 또한 지극히 현재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논의를 정리하면, Y2K 국면을 통해서 파악(또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모든 컴퓨터가 연결되고 모든 데이터가 상호 운용되는 정보화 환경의 형성, 둘째, 그 특징들이 더 없이 극대화된 형태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현재의 매개 환경, 그리고 셋째, 이러한 환경 구성을 통해 작동하는 기반구조적 형태의 권력 작용이다. 이로부터 장치, 사회, 환경,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터넷¹⁾과 (환경관리)권력

1)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주의 것으로 재설정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 글은 1980년대의 정보통신기술혁명부터 시작해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거쳐 현재의 사물인터넷에 이르는 대략 30여년의 시간을 논의의 범위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권력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별 기술들 모두를 가로지를 수 있는 개념 또는 그러한 흐름에 대한 명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각각의 기술들이 저마다의 매체적 특징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모두는 별개의 것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향성과 상호 관련성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한에서만 이로부터 특정한 권력의 벡터를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와이파이와 권력, 빅데이터와 권력, 구글과 권력 등과 같이 개별항들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이 모두를 가로지르는 권력의 내적인 원리와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은 이들 모두에 대해 기반구조적(infrastructure) 토대를 제공하는 인터넷을 가족 유사

그리고 사회라는 이 글의 문제설정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 이 글이 Y2K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Y2K를 둘러싼 당시의 사회적 상상들(social imaginaries)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정보화의 흐름이 세계의 내·외적 환경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준과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환경이 다시 이후의 흐름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취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논의는 앞서 제기한 쟁점들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이 글의 문제설정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 읽어나가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정보화 흐름의 주요 기술적 계기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세계를 만들어 냈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이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이르고 있는 현재적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정보화 환경이 어떻게 일상적인 환경 구성의 원리로부터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양상과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체의 존재와 역할은 어떤 형태로 축소 또는 약화되고 있는지, (주체를 둘러싼) 환경 그 자체는 또 어떻게 권력 작용의 주요 기제로 기능하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이처럼 상시적이고 자동적이며 잠재적인 매개 환경의 구축이 야말로 이전과 구분되는 특유한 형태의 권력 작용임을 밝혀 보일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를 ‘환경관리권력(Environment Power)’²⁾으로 명명

성(family resembl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Wittgenstein, 1953/2006). “몸집,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 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사성들은 그렇게 겹치고 교차(Wittgenstein, 1953/2006, 67쪽)” 되면서 가족적인 유사성을 이루는데, 이에 따른 경우 개념 또한 어떤 단일한 속성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기보다는 그것들 사이에 겹쳐지고 교차되는 유사성들을 중심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박승일, 2017, 15-16쪽). 즉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일련의 정보통신기술들을 가족 유사적인 의미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다.

2) “관리권력이라는 표현은 한국어 역자의 선택을 따른 것으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함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역자인 심세광은 푸코의 1978~79년 강의 제목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으로 번역했는데, 이 가운데 생명관리정치(biopolitics)와 생명관리권력(biopower)은 역자들[진태원(2006), 조정환(2011), 그리고 한병철(2014/

할 수 있다면, 이 글은 이러한 환경 관리의 메커니즘이 (그 환경에 속한) 개인과 인구의 사고 및 행동을 제어·인도·촉발함으로써 통치의 메커니즘과 테크니들을 더 없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작동시키고 있으며, 또 그 결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관리사회(The Society of Control)’³⁾를 그 근본에서부터 지탱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

2015)의 김태환 등)에 따라 생정치/권력, 생명정치/권력, 삶정치/권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곤 한다. 그러나 Biopower는 주권권력이나 규율권력과는 달리 생명 그 자체가 권력이라는 뜻도 아니고 삶이라는 넓은 외연을 전부 다 포괄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생명이나 삶으로 표기할 경우 자칫 오해될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Biopower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이 정치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된 상황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기에, 특히 삶정치/삶권력으로 표기할 경우 생명 자체의 특수성을 누락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생명정치/생명권력의 경우에는 생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어에 대한 직역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나, 그 안에 (신)자유주의적 통치 원리를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까닭에, 자칫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의 정치/권력이나 반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정치/권력(가령 인종주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런 반면 생명관리권력은 ‘관리’라는 표현이 임의로 추가되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자본에 의한 생명의 관리, 조절, 통제 작용이라는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푸코가 의도했던 바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한국어 번역본의 표기를 좇아 Environment Power를 ‘환경관리권력’으로 표기하고자 한다’(박승일, 2017, 16쪽). 영어 표기에는 control이 없지만 생명(관리)권력과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 표기에 관리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환경권력’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번역자의 번역 의도에 대해서는 심세광(2011)의 옮긴이 해제를 참고할 것.

3) “이 글에서는 들뢰즈의 통제사회 개념을 관리사회로 수정해서 표기한다. 한국어 번역은 The Society of Control을 통제사회로 표기하지만 이때의 control에는 사실 통제뿐만 아니라 관리와 제어의 뜻도 함께 담겨져 있다. 베니거는 제어를 “한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면서 다른 행위자에게 그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가하는 것”(Beniger, 1989/2009, 36쪽)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의는 다른 두 단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세 단어 모두 사람의 행동이나 사물의 배치에 작용을 가해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 관리, 제어 모두 의미상으로는 행위를 인도하고 유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베니거 자신의 용례가 산업 기계와 정보 처리 및 자동화 기술에 환경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제어라는 단어는 기계·전산·자동화 설비에 대한 작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게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통제는 여감이 제어와 관리보다는 강한 정도의 개입을 가리킬 때가 많기 때문에, 위의 개념을 통제사회로 번역할 경우 의도치 않게 <1984>식의 억압된 사회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관리(management) 메커니즘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앞의 두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영역에 두루 쓰이면서도 보다 유연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사회적 짜임과 그 변화를 담아내기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들뢰즈의 이 개념을 대개 ‘통제사회’로 번역하는 편이지만, 이 개념이 규율권력/규율사회의 대비 속

같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환경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의 작용을 개별 장치(dispositif)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Agamben, 2006/2010: HS).⁴⁾ 이는 물론 “스스로의 역사와 스스로의 도정과 스스로의 기술 및 전술을 가지고 있는 미세 메커니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권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전면적 지배”에 의해 투입되고 “사용·굴절·변형”되어 왔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푸코(Michel Foucault)의 논의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IFDS, 49쪽). 푸코가 규율권력(discipline power)을 논증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러한데, 푸코에게 규율권력이란 학교, 감옥, 병원 등과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가로지르면서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이자 합리성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구체적인 장치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규율권력의 현실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던 푸코의 작업을 바로 떠올려 볼 수 있겠다(SP). 즉 개별 장치들은 단지 자체의 설계와 목적에 따라 작동할 뿐이지만, 이러한 장치들의 우연적인 접속과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사회적 관계)는, 그리고 이 모두를 관통하면서 작동하는 (기술적·정치적) 합리성의 체계는 특유한 형태의 권력 관계 및 이와 결부된 통치의 실천들과 전략들, 효과들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대개적 환경

에서 제안된 것이니만큼, 통제라는 강한 어감의 표현보다는 ‘자유’와 ‘통제’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관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글은 The Society of Control을 통제사회가 아닌 ‘관리사회’로 표기하고 이를 앞서 제시한 관리권력과 조응시킴으로써 관리권력/관리사회라는 조합을 제시할 것이다(박승일, 2017, 17쪽). 참고로 프랑스어 contrôle에도 통제와 관리라는 뜻이 모두 담겨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개념을 관리사회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사토, 2009/2014).

4) 이 글에서는 푸코의 저작을 다음과 같은 약어로 표기한다.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SP,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IFDS, 『성의 역사 1권(Histoire de la sexualité I)』→HS, 『안전, 영토, 인구(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STP, 『생명관리정치의 탄생(Naissance de la biopolitique)』→NB. 자세한 서지는 참고문헌을 참고할 것.

구성과 신자유주의의 환경 관리적 통치 전략 사이에서,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 장치들의 작동과 환경 관리라는 권력의 벡터(vector) 사이에서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을 읽어내는 게 무리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때의 친화성은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베버(Max Weber)의 통찰대로, 두 항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아니라 우연적인 상호 관련성을 뜻하는 것이고 말이다(Weber, 1905/2010). 그리고 이처럼 장치와 권력을 하나의 문제설정 안에 위치시킬 때에야 서로 다른 인터넷 장치들이 어떻게 그 상이한 특징과 용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에의 통치라는 효과를 산출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짜임(configuration)⁵⁾, 곧 관리사회의 일단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계급권력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가장치만이 아니라) 특정한 장치로 물질화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Poulantzas, 1978/1994, 57쪽)는 말은, 그러므로 그 역으로도 성립 가능하다. 권력이 장치로 물질화된다는 말은 곧 장치가 권력을 담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치와 권력, 이는 인터넷과 환경관리권력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그 근본에서부터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라 할 것이다.

2.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1) 세계의 평평화를 이끌어낸 열 가지 동력과 심중 융합

먼저 정보화 기술이 세계를 재편해 나간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

5) configuration은 배치, 배열, 구성 등으로 번역되곤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 요소의 동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상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형성 중인 과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짜임'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다. 씨실과 날실로 직조되는 옷감의 짜임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장태순은 바디우(Alain Badiou)의 <비미학>을 번역하면서 짜임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 바 있다(Badiou, 1998/2010).

요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과거 어느 때에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있었다고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역사적인 층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정지훈, 2010; 2014), 이것이 현재의 매개적 환경 구성과는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연속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와 이해는 불가피하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물리적·지정학적 장벽이 정보혁명으로 인해 약화 또는 와해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변화의 양상들을 평평화(flatization)라는 개념을 통해 토틀아본다. 세계가 말 그대로 평평하게(또는 수평적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일단 그가 제시하는 평평화의 열 가지 동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Friedman, 2005/2006).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 첫 번째 동력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윈도우(windows)의 개발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년)와 잇따른 소련의 붕괴(1991년)는 냉전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세계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공간으로 재편해 내었다. 이 과정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정보혁명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 팩스와 모뎀, 개인용 컴퓨터, 윈도우 기반 PC의 개발(1990년)로 인해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 자유로워지면서 전체주의 체제의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이를 지탱하던 정보 독점, 생산 체계, 규제 양식 등에 균열이 가해졌기 때문이다(Dyer-Witthford, 1999/2003). 두 번째 동력은 웹(world wide web)의 일반화와 웹브라우저(web browser)의 대중화이다. 윈도우와 개인용 컴퓨터만으로는 정보를 자유롭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이 전 세계 컴퓨터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정보 교환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면,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에 퍼져 있는 온갖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1991년). 세 번째는 워크플로(workflow)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확산이

다.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으로 전송·공유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표준화되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고 또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공동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네 번째는 업로딩(uploading)으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의 출현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용자 개개인은 점차 정보의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생산자로 변모되어 갔으며, 바로 그만큼 세계 구성에 참여하고 정치적·문화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동력은 아웃소싱(outsourcing)과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활성화이다. 아웃소싱이 기업 기능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라면, 오프쇼어링은 그 범위를 다양한 분야 및 해외로까지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 광섬유 케이블이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연결하면서 데이터 통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결과, 바로 그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 또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일곱 번째는 효율적인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확립이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 통신망의 확립으로 공급, 유통, 소비의 사슬은 그만큼 더 정교하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는 전혀 없이 유기적인 형태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여덟 번째는 조금은 다르게 정의된 인소싱(insourcing) 전략이다. 예컨대 UPS는 자사의 물류 센터에 AS팀을 설치해 도시바의 고객들이 보낸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수리해 바로 보냄으로써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 이처럼 기업의 고유한 사업 영역 안으로(in) 들어가 특정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프리드먼은 인소싱이라고 표현한다. 아홉 번째는 구글 검색을 통한 인포밍(informing)의 일상화이다. 컴퓨터와 윈도우의 보급으로 인해 개인이 정보의 제작자가 되었다면,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이제 개인은 무한대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탐험해 나가는 정보의 탐색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디지털(digital), 모바일(mobile), 퍼스널(personal), 버추얼(virtual)

흐름에 대한 스테로이드(steroid) 작용이다. 프리드먼은 마치 스테로이드가 근육을 강화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화, 모바일화, 퍼스텔화, 버추얼화를 강화하면서 세계의 평평화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물론 이상의 열 가지 동력들은 각기 따로 작동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프리드먼은 이 과정이 각각 구분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세 단계의 융합을 만들어 냈다고 말하면서, 이 삼중 융합(triple convergence)으로 인해 비로소 위의 열 가지 동력들이 실효적인 의미에서의 평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Friedman, 2005/2006).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삼중 융합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 글의 논의와는 어떻게 연결 또는 단절되는가.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융합은 새로운 웹 기반 플랫폼(platform)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열 가지 동력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과 융합을 이루어냈고, 2000년 즈음에야 비로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평평화를 이끌어냈다. 플랫폼의 사전적 정의대로, 이 융합은 어떤 행위는 가능케 하고 또 어떤 행위는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틀(또는 환경)이 재구축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플랫폼 효과(platform effect)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가 결합되어 경제적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과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융합이다. 수평적 협력 체계, 가치창출 메커니즘, 새로운 일처리 방식, IT 노동자·경영자·전문가 집단 등의 요소들이 새로운 웹 기반 플랫폼과 융합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 체계(New Economy)가 만들어져 갔다(Henwood, 2003/2004).

이어서 세 번째 융합은 냉전 체제에서 해방된 30억 인구가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했다. 90년대 이후부터 소련, 동

유럽, 중국, 인도,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로 밀려들어왔다. 전화도 없었던 사람들이 곧장 핸드폰을 사용하는 식으로, 변화의 중간 단계가 생략되면서 바로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갔다. 이미 웹 기반 글로벌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었고 이를 가치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었던 이상, 세 번째 융합인 대규모 참여 주체의 등장과 결합은 그만큼 손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논의는 인터넷이 세계를 말 그대로 평평하게 만들어 가는 변화의 흐름을 각각의 기술적 요소 및 그 요소들의 융합 과정을 통해 자세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참고가 된다. 결국 핵심은 세계가 수직적·위계적인 정보 하달 체계에서 수평적·협력적 정보 공유 체계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그만큼 평평한 매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현재의 매개 환경은 단연 이러한 변화 위에서, 그것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고 말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Y2K는 바로 이러한 매개 환경을 바탕으로 자체의 문제설정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면서도 정작 이 글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터넷 플랫폼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사용자 대중의 삼중 융합이 이 글의 문제설정을 따라 각각 정보화 환경의 관리와 신자유주의적 잉여가치 메커니즘 그리고 여기에 주체화/예속화된 인구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후자야말로 전자의 조합보다 더 정확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가능한 질문은 이렇다. 인터넷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적 조건인가 아니면 특정한 환경의 구축을 통해서 작동하는 권력의 한 유형인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축적 체제의 가치창출 메커니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용자 대중의 등장은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주체의 탄생과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가. 삼중 융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짜임은 어떤

통치 전략과 공명하면서 자체의 고유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특징들을 (재)구성해 나가는가 등. 프리드먼의 논의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생략되어 있으며, 때문에 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세계의 현상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치와 권력 그리고 사회라는 이 글 본래의 물음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의 평평화라는 개념을 참고하면서도 이를 이 글의 문제의식에 맞게 보완 또는 수정해 나가야만 하며,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설정 속으로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우선 프리드먼이 제시한 변화의 흐름을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현재적 수준으로까지 밀고 나가는 한편,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권력과 사회의 관점에서, 즉 매개적 환경 구성의 형태로 작동하는 통치 권력의 측면과 그러한 힘들이 중첩된 결과로서의 사회적 짜임의 측면에서 다시 읽어내고자 한다.

2) 무선인터넷의 일상화와 스마트폰의 대중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평평화라는 개념은 세계를 둘러싼 매개 환경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문제화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유효성을 갖지만, 그러한 매개적 환경 구성이 외적인 변화를 넘어 주체성의 형성이나 권력의 메커니즘과 같은 내적인 작용들로까지 확장·변용되고 있는 지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 표면적인 묘사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세계가 평평해지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구축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계승·변주되면서 현재의 매개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 가운데 어떤 기술적 요소가 그 추이를 확대·강화시켜 나가면서 주체의 구성 및 권력 작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보다 정확한(그러면서도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해낼 필요가 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열 가지 동력과 삼중 융합의 상황 이후로 전개된

변화의 양상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크게 네 가지 단계(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귀결되고 있는지 대략적이지만 전체적인 상을 그려볼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선인터넷의 일상화와 스마트폰의 대중화이다. 세계의 평평화가 '인터넷의 일상화'와 '일상의 인터넷화'라는 동시적인 효과를 이끌어 냈다면, 즉 인터넷이 일상 곳곳으로 확산·침투·착근되게 만들고 이와 동시에 일상 또한 인터넷과의 연결 속에서 자체의 성격을 재구성하게 만들었다면, 그 연결의 밀도와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은 단연 이후 개발·보급·확산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 할 것이다.

무선인터넷은 말 그대로 연결선이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뜻한다.⁶⁾ 무선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단순 접속을 넘어서 대용량 영상 스트리밍이나 실시간 연결, 다중 접속 등의 작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무선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비로소 현실화된 셈이다(김동환 외, 2002). 이전의 인터넷 환경이 유선 연결에 특화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인터넷 선에 연결된 곳에서만 접속이 가능했던 데다가 통신 케이블 설치의 비용 문제로 인해 이마저도 도시 중심의 공간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면, 무선인터넷은 선 없이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모든 제약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술적 계기가 되었다. 즉 무선인터넷은 선(線)을 통한 연결을 면(面) 안에서의 연결로 전환한 것이며, 그 밖으로써 일시적 연결을 상시적(또는 잠재적) 연결로, 장소적 연결을 공

6) 이 글에서는 wifi, 3G, wibro, LTE, 5G 등과 같이 무선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기술을 무선인터넷으로 통칭해서 사용한다. 개별적인 차이보다는 무선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이다.

간적 연결로, 자발적 연결을 비자발적(또는 자동적) 연결로 바꾸어낸 것이다. 이로써 일상적 공간 전체가 그대로 인터넷의 매개 안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안의 사람들 또한 과잉 연결된(over connected)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음은 물론이다(Davidow, 2011/2011).

물론 이러한 변화 속에는 스마트폰의 개발, 도입, 확산 과정이 분리 불가능한 전제로 기입되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무선인터넷만으로 연결사회가 완성될 수는 없었다. 무선인터넷이 선 없는 연결을 가능케 한 기술적 조건이라면, 이 조건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고 실제화한 장치는 전적으로 스마트폰이었다. 무선인터넷으로 인한 잠재적인 연결 상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비로소 현실화(actualization)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대중의 삶 가운데 그만큼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확산 및 침투되어 갔으며, 그 결과 현재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일상화가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smartphone, *n.d.*).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스마트폰의 공통 특징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확장 가능성이다. 바로 이로 인해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스마트한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앱(app.)들이 추가됨으로써 스마트폰은 어느 한 가지 용법에 국한되지 않는, 거의 만능에 가까운 용법을 얻게 되었다. 무수히 많은 앱의 기능과 활용 범위만큼이나 스마트폰의 쓰임이 가히 일상적인 영역 전부를 아우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며, 단지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열어 놓은 세계 속에서 일하고 정보를 얻고 친구를 추가하고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일종의 내재화된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스마트폰이 우리를 특정한 형태로 구성해 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이기까지 하다.

무선인터넷이 구축해 놓은 상시적·공간적·비차별적 연결 환경은 (한국의 경우) 인구의 80% 이상이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과 만남으로써, 그야말로 인구라는 수준에서 그 연결의 잠재성을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뒤집어 말하자면, 스마트폰은 바로 이 무선 인터넷과 연결됨으로써 자체의 활용 범위를 온·오프라인 영역 전체로까지 무한정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무선인터넷이 스마트폰의 발전을 추동하고 동시에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의 연결도를 확대해 나가는 식이다.⁷⁾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렇듯 서로를 강화하는 준거가 되면서 그 협력 작용의 결과로 역사상 유례없는 연결 사회를 만들어냈다. 자본, 노동, 상품, 사람, 지식, 정보 등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네트워크 사회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든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굳이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인터넷 선에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항상-이미 네트워크화된 세계 ‘안에’ 놓여 있게 됐다(Castells, 1996/2003).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강하게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책상 위의 놓여 있던 분리된 컴퓨터(1990년대)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1990~2000년대)를 지나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2000년대 초반)을 거쳐 이제는 손 안에 든 정보 환경(2008년 이후)으로 그 모습과 성격을 바꾸어 가고 있다. 컴퓨터보다 몇 배나 많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개개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도,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여가를 보내는 중에도,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7) 예컨대 2007년 출시된 아이폰3는 자체에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이후 스마트폰과 와이파이의 결합(articulation)을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했다.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쥔 개인들은 마치 머리 위에 빨간색 무선인터넷 표지를 달고 있는 개별 송수신체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Berardi, 2009b/2013). 이 같은 주체의 형상을 무엇이라 규정 하든, 이것이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열어 놓은 매개적 환경 속에서 시대적이고도 종별적인 주체상을 이루고 있음은 더 없이 분명해 보인다. 네그리(Antonio Negri)의 다음 말은 이러한 논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다.

소통과 사회적 미디어는 그들을 일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그것에 묶어놓는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과 무선 접속 장치들을 가지고,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음을 곧 깨닫게 된다. 미디어됨(mediatization)은 노동과 삶 사이의 구분을 점차 모호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다(Hardt & Negri, 2012/2012, 57쪽).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잠재적 연결 상태가 일종의 환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환경 구성이 주체의 경험 이전에 존재하면서(주체의) 경험과 인식을 틀 지어내는 일종의(역사적인) 선형적 범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Davidow, 2011/2011). 이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태어난 디지털 본(digital born) 세대들에게 더욱 그러한데, 이들에게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 잠재적 연결 상태는 그 자체가 이미 선택 불가능한 소여(所興)의 환경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rardi, 2009b/2013; 2011/2013). 물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환경의 작용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산업화 세대부터 디지털 본 세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인구가 항상-이미 무선인터넷의 일

상화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현재의 우리는 정도야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열어젖힌 잠재적인 연결 상태 안에(또는 그러한 환경 안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자들조차도 전적으로 이 환경 안에서만 그러할 수 있으며, 결코 그 환경에 앞서서 홀로 그러할 수는 없다. 또한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동적 사용자들조차도 이러한 환경 구성의 힘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Carr, 2010/2011; 2014/2014).

3. 인터넷과 ‘매개 안에 있음’

1) ‘매개 안에 있음’과 주체화의 문제설정

이 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구성의 작용을 ‘매개 안에 있음(being-in-mediation)’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해 보고자 한다.⁸⁾ 이 개념은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가 매개의 외부에 있지 않고 특정한 매개 작용 안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즉 그것은 우리의 현존재가 매개에 대한 선택 가능성 위

8) ‘매개 안에 있음’이라는 개념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세계 안에 있음(being-in-the-world)’이라는 개념을 이 글의 논의에 맞게 차용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세계 없는 주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세계(Welt) 안에서만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세계’는 존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시공간이자 의미와 해석이 공유되는 공동체적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안에 있음’은 이러한 시공간 세계 안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에 있다는 것은 존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관여하다, 제작하다, 경작하고 가꾸다, 사용하다”(Heidegger, 1927/1998, 85쪽) 등과 같은 실존적인 삶의 양식을 갖게 됨을 뜻한다. 즉 세계와의(그리고 사물들과의) 밀접한 의미 연관 속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현존재는 말 그대로 그러한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안에 있음’의 모티프를 매개 안에 있음이라는 개념으로 전유해 보고자 했다. 다만 하이데거의 저 개념이 향하고 있는 공동체, 고향, 대지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매개라는 조건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음을 자체에 담고 있다(Derrida, 1967/2010; Kittler, 1999; Norris, 1988/1999). 실제로 우리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먼저 그것이 구성해 놓은 시공간 환경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 말을 바꾼다면 이들 매체가 열어 놓은 매개적 ‘관계 안에’ 있게 된 다음에야, 그리고 그에 따른 주체적 변용이 수반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주체에 의한 ‘통해서’의 용법이 가능해진다. 결코 그 역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터넷이 조금씩 열어젖힌 시공간 세계 속에서 비로소 자체의 쓰임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주체화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다.⁹⁾ 이 가운데 주체는 더 이상 원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만 매개의 효과로서 존재할 뿐이다(Anderson, 1991/2006; Benjamin 1936/2007; Kittler 1999).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주체 그 자체가 아니라 주체를 형성 및 주조하는 규정성으로서의 매개 환경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처럼 매개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부의 질서와 체계를 교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외

9) 매개 안에 있음은 데리다의 ‘에크리튀르(écriture)’ 개념과도 일정 부분 겹쳐진다(Derrida, 1967/2010). 기원이 먼저 있고 그것이 에크리튀르(글쓰기 또는 기록)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에크리튀르에 의한 반복을 통해서야 비로소 기원이 기원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특정한 매개 환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 특화된 주체들(또는 주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문 등을 통해 열려진 근대적인 에크리튀르 안에서 비로소 상상적으로 공동체화된 국민이 존재(혹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Anderson, 1991/2006). 다만 에크리튀르가 기록(또는 글쓰기)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그래서 그만큼 근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하다면), 매개 안에 있음은 현실적 매개 장치들이 열어놓은 실제적이고도 일상적인 환경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만 타도 바로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현대의 도시 공간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즉 이 글에서 제안한 매개 안에 있음은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형이상학적인 색깔을 뺀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데리다의 에크리튀르 개념을 보다 일상적인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매개적 환경을 통해 가능해진 특정한 형태의 권력 작용을 추가한 것 또한 이 개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를 비정상이자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이후로도 철저히 그 안에만 머물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는 매개의 안을 편리, 효율, 이익, 소통, 발전, 속도, 접속 등의 요소들로 가치 평가함으로써 그 바깥의 공간을 이완하는 반대의 것들로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시금 그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재생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이렇게 매개적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boundary)를 철저히 그 틀에 한정시킴으로써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발생을 손쉽게 관리·통제·제어하려는 통치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즉 매개 안에 있음은 특정한 형태로의 환경 구성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 관계의 메커니즘과 분리 불가능하다. 정보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오직 그 안에서만 일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편리하고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즐기고 원하게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주체적 변양을 이끌어내고 또 자발적으로 이 과정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사고의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는 권력의 작용인 동시에 그 결과로서의 주체화 작용이기도 하다 (Lukes, 1974). 환경과 권력 그리고 주체가 하나의 문제설정을 이루는 지점이다.

그러나 환경에서 주체로 이어지는 과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매개 안에 있게 만드는 (환경관리)권력의 작용은 이에 최적화된 주체를 생산하는 한편, 이것과는 반대로 탈주체화/탈예속화의 가능성 또한 동시에 열어 놓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그것이 아무리 편재적이고 즉각적인 시공간 환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의 신체(및 정신)로부터 분리된 채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즉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이 자체의 논리에 따라 개인을 주체화시킨다고 할 때, 여기에는 환경에 의해 구성된 주체가 적어도 물질적·육체적인 형태로나마 붙박여 있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 과정은 아직 고정된 주체를 요구하거나 혹은 주

체적 작용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구성된(constituted subject) 주체에서 구성하는 주체(constituent subject)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사토, 2008/2012). 주지하다시피 주체화가 곧 예속화이기도 하다는 것은 구조주의 이래 일종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lthusser, 1995/2007). 그런데 이는 개인이 구조의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주체가 되는 과정만을 강조할 뿐 정작 그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섭, 갈등, 저항, 거부, 위반, 타협, 변화 등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도처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움직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논의를 길게 이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탄압과 부패에 맞서는 시민, 거대 기업에 횡포에 맞서는 소비자, 언론 왜곡에 저항하는 시청자, 가부장주의를 비판하는 여성과 남성 등 수많은 저항의 주체들을 언제 어디서든 목격할 수 있다(Shirky, 2008/2008; Mackinnon, 2013).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구조주의적 견해는 현상적으로라도 일정 부분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 때, 주체화와 예속화 사이에는 이 둘이 꼭 같지만은 않으며 심지어 어긋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빗금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주체화=예속화(subjectification)가 아니라 주체화≠예속화(subjectivation)이다.¹⁰⁾ 이 빗금은 주체화와 예속화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으며 결코 하나로 봉합될 수 없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Lacan, 1994). 환경에 의한 주체 형성의 현실성은 그것이 역전된 형태로서의 주체에 의한 환경적 반응의

10) 푸코는 〈패락의 활용〉과 〈자기 배려〉에서 subjectification과 subjectivation을 구분해서 사용한다(Foucault, 1984/2004; 1984/2004). 전자가 권력관계에 의한 예속적 주체의 형성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후자는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난 자기 배려적 주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 둘은 단절적이기보다는 모순적이면서도 동시적인 과정을 이룬다. 이 글에서는 주체화=예속화와 주체화≠예속화에 각각 subjectification과 subjectivation을 대응시켜 표기했다.

잠재성을 항상-이미 내포한다. 환경에 의해 구성된 주체는 우발적 사건과 변혁적 계기에 따라 언제나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 “인민들은 봉기한다. 그것은 사실이다”(Foucault, 2000, p.452). 푸코가 말한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과 권력에 의해 주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주체의 전적인 순종과 무기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체화의 안정적인 고리를 과열시키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며 그 결과로서 사건에 충실한 주체들을 필연적으로 생산해낸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사토 2008/2012; Bensaïd, 2001/2003).

이 논의를 끌고 들어온 것은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변증법적 과정이 현대의 매개적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이다. 즉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자체의 매개 환경에 철저히 예측된 수용자 주체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으로써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 예측의 증상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용과 같은 긍정적 예측의 증상들을 이끌어냈던 게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 예측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젖힌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Shirky, 2008/2008; Mackinnon, 2013). 즉 주체화는 권력에 의한 예측화임과 동시에, 권력이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인 만큼 관계 그 자체에서 배태되는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권력 관계는 다수의 저항지점에 따라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IFDS, 115쪽). 이는 다시 말한다면 권력의 작용 속에는 항상-이미 경쟁, 갈등, 저항과 같은 탈주체화의 계기가 상존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STP). 더욱이 이때의 수용자 주체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똑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를 생산·변형·공유할 줄 아는 주체이자 심지어 가장 자유로운 주체이지 않던가(Levy, 1999).

요컨대 정보화된 주체의 몸 안에는 지배와 예측의 잠재성만큼이나

저항과 자유의 잠재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철저히 매여 있던 수용자 주체가 오히려 그 고유한 (정보화 사회의) 환경적 특징을 등에 업은 채 가장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자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역설마저 가능케 한다. 예컨대, 2008년의 촛불 국면에서 시민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활동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위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이집트의 페이스북 혁명이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등도 그 중심에는 온라인과 모바일 활동에 주력한 시민들이 있었다(백철, 2011). 심지어 현대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변혁과 저항의 움직임 속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다. 매개 안에 있는 주체들이 그 매개적 관계의 양상을 바꾸어 낼 수 있음을, 혹은 바꾸고자 노력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광석, 2016).

그런데 물론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탈주체화의 가능성은 다시 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 작용에 의해 계속해서 포섭되고 순치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 또한 또 하나의 변증법적 나선을 이룬다. 앞서 논의한 바, 환경에 의해 구성된 주체가 (역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환경 관리를 통해서 작동하는 관리권력의 메커니즘이 불가피하게도 구성적 주체(구성하는 주체)로의 전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통치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력은 물음에 봉착한다. 그리고 가능한 답변 두 개를 내놓는다. 그 하나가 주체의 자발적인 자기 통치(governing the self)를 이끌어냄으로써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상쇄시키는 것이라면(Cruikshank, 1999/2014; STP),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주체를 위치시키지 않은 채 단지 환경적이고 기계적인 작용만으로 최적의 통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Lazzarato, 2014/2017). 전자와 후자 모두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봉쇄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방식 모두 자유 그 자체를 자체

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 권력과 친화성을 이루고 있다.¹¹⁾ 신자유주의 권력은 자기 통치와 환경 통치라는 상반된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하나로 통합해 내었으며, 이로써 규율권력이 도달할 수 없었던 최적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구름 너머의 매개 환경

앞서 논의했듯이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의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여기에는 필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자유롭게 정보를 송수신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단계는 주체를 요구하며 주체와 함께 작동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체는 이 장치에 붙박여 있는 만큼이나 그로부터 탈주체화할 가능성 또한 더불어 갖게 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개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체화와 탈주체화라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개 안에 있음과 주체화=예속화의 결속은 그 시효가 끝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매개 안에 있으며, 심지어 더욱더 견고하게 붙박여져 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가능한 질문은 이렇다. 만일 주체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점차 그 존재와 역할을 줄여나간다면, 그럼으로써 주체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즉 주체가 구성되는 존재로만 남고 더 이상 구성하는 존재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더 편의적이고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게 만든다면, 탈주체화의 가능성은 진정 어떻게 될까.

11) 이 두 작용은 각각 박승일(2017)의 3장과 4장의 내용을 이룬다. 이 글(3장)이 장치와 환경에 의한 통치에 집중하고 이를 환경관리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면, 4장은 주체의 정신적 작용에 대한 통치의 가능성을 정신관리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박승일(2017)을 참고할 것.

이 질문은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환경으로 넘어가는 현재적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실효성을 얻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공학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체의 신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주체의 선택과 결정 또한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된다. 당연하게도 주체의 존재와 역할이 약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탈주체화의 가능성 또한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주체는 여전히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전처럼 일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생산·소비·공유하겠지만, 이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생산해낸 각종 수많은 데이터들은 그것과는 다른 층위에서, 즉 주체가 알 수 없고 개입할 수 없으며 조작할 수도 없는 어딘가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해되고 가공되고 조립되어 팔려나간다. 그리고 이렇게 재조합된 데이터들은 결국 그 결과값인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주체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복잡다단한 사고와 행위를 예측하고 틀 짓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매개 안에 있음의 환경이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약화 또는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매개 안에 있음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들 세 가지 장치, 즉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권력과 장치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기에(Agamben, 2006/2010; Althusser, 1995/2007; HS; Poulantzas, 1978/1994), 여기서는 세 장치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세세한 기술적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래의 전망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이 글에서는 이 세 장치가 환경에의 관리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우연적인 효과로서) 실현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의 일단

을 어떤 식으로 지탱해 가고 있는지, 철저히 이 문제설정을 중심으로 논의할 진행해 나갈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부터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n.d.*)을 뜻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속에서 사용자들은 더 이상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직접 소유·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구름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가벼운 단말기만 있으면 된다. 하드 디스크에 자료를 저장하는 대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 작업하는 식이다. 구름(cloud)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오카지마 유시(岡嶋裕史)는 클라우드의 핵심이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에 있다면서, 이를 “인터넷상에 거대한 컴퓨터를 한 대 구축하는 것”(오카지마, 2010/2011, 31쪽)이라고 말한다. 물론 컴퓨터 한 대만 가상화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가상화한다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구글과 아마존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인터넷 상에 가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를 사용자들이 필요에 맞게 빌려 쓰는 방식이다. 예컨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각 가정과 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돈을 주고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더욱이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단순히 데이터 저장 공간이나 컴퓨터 연산 처리 능력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로부터 산출된 각종 정량적 데이터와 통계를 (무료로) 얻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또 다른 잉여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된 서버와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연산 장치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고

다시 이를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분산 처리(distribute processing)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분산된 시스템 전체가 마치 한 대의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처럼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들을 세계 각지의 데이터 센터에서 분산 처리하면서도 그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위치 투명성(location transparency)을 갖는다(오카지마, 2010/2011). 다시 발전소의 예를 빌리자면, 각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디서 생산되든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야 전기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데이터가 어디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야 공급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그만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연산 처리나 기억 저장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은 오히려 클라우드의 이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오카지마, 2010/2011, 43쪽)라 하겠다.

주지하듯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에 저장한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찍는 사진들에서부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데이터 및 모든 이메일 내역, N드라이브와 드롭박스 등에 저장하는 각종 문서와 자료들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는 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기업의 것이기도 하다. 구글 검색, 구글 지도, 구글 캘린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는 우리의 관심사와 현재 위치, 자주 가는 장소, 해야 할 일, 이동 패턴 및 교통 경로, 금융 거래 내역 등 그야말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개인의 동의와 함께 자체의 서버에 저장한다(물론 이 모든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페이스북은 개인의 온라인 인맥 네트워크를 관할함으로써 정보의 관리 차원을 개인에서 사회적 층위까지 확대시킨다. 이쯤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단지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조각이라고만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개인이라는 전체를 담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마치 신용카드 전표처럼 개인의 일상사(史)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만들어낸 정보가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 독립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가운데 개인은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빼앗기고 결국 그 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귀하가 콘텐츠를 Google 서비스로 또는 이를 통해 업로드, 제출, 저장, 전송 또는 수신하는 경우 귀하는 Google(및 Google의 협력사)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이차적 저작물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주장은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구본권 2015). 더욱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대 이점 중 하나가 분산 처리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에 있다고 한다면¹²⁾, 문제는 이러한 투명성이 사용자 주체 모르게 혹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 결과 주체의 선택과 개입 그리고 결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산 처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효과적이고 사용자 편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이 결국 정보에 대한 주체의 권리와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논의는 최근까지도 기술적 차원 및 그것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변화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이다(Mosco, 2014/2015). 그런데 이에 대해 모스코(Vicent Mosco)는 현

12) 여기서 투명성은 객체의 속성을 숨김으로써 사용자가 그 작동과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투명성, *n.d.*).

재의 논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생략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클라우드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에는 인터넷이 사회에 도입된 이후 그 고유의 매개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변화들, 가령 시민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의 발전,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 과정의 심화, P2P를 이용한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등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일구어냈던 정치·사회·문화적 가치와 그것의 현재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Mosco, 2014/2015). 대신 그 빈자리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첨단 장치들의 최적화·자동화·기계화된 작용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논의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생산과 앎의 문화를 이전과 다른 형태로 촉발시키고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모스코는 이러한 변화의 경향을 디지털 실증주의(digital positivism)로 정의하는데, 이는 “정량적 측정, 상관관계, 알고리즘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에게 현상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믿음”(Mosco, 2014/2015, 363쪽)을 일컫는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세계 각지의 데이터 서버에 저장 중인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들은, 데이터들 사이의 상관성을 밝혀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정량적 데이터들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를 다른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믿겨진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특정 형태의 지식을 선호하는 앎의 문화(culture of knowing) 및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앎의 방식(ways of knowing)”(Mosco, 2014/2015, 308쪽)을 이전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주도하고 또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된 앎의 문화와 앎의 방식은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앎의 문화와 방식들보다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 그렇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것은 차라리 앎의 문화와 방

식을 가로지르는 합리성의 체계가 특정한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실증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합리성의 체계 속에서는 오직 수학적·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만이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는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문화와 방식들은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삶의 문화와 방식이 재구성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삶의 주체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 과정은 결국 삶의 문화와 방식의 변화만큼이나 주체의 위상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삼민, 2016; 김예란, 2013; 김지연, 2015).

디지털 실증주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그 데이터의 출처인 인간 개개인들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소스(data source)라는 한정적인 위치로 유예 또는 축소되어 버리고 만다. 이를 주체의 데이터화(datafication)라고 할 수 있겠다. 주체는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송수신체와 다르지 않게 되며 이때에도 개별 인간이 아니라 인구라는 층위에서만 유의미해진다. 인구가 내뿜는 거대한 데이터들의 더미 속에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이런 의미에서 인구와 데이터가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지 잘 보여준다. 주체는 인구로 흡수되고 주체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은 데이터로 치환된다. 그리고 인구와 데이터 사이의 상관성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합리성의 체계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고 만다. 인간은 사고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주체의 자리에서, 설명되고 판단되며 예측되는 객체의 자리로 내몰린다(O'Neil, 2016/2017). 주체가 사라지면서 탈주체화의 가능성 또한 더 불어 사라지게 됨은 물론이다. 그 결과 정치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거나 갈등하기도 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이 위치해 있는 세계에 개입 및 관여하는 주체화-탈주체화의 변증법적 과정은 그만큼 약화되고 만다.

요컨대 클라우드 컴퓨팅이 열어젖힌 실증주의적 삶의 문화 속에서

사용자 주체들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소스로 이해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이해될 뿐, 저항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정치적 주체로 이해되지 않는다(Mosco, 2014/2015). 이 점이 중요한데, 이로써 탈주체화의 계기 또한 자연스럽게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빅데이터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주체가 데이터로 치환되면서 점차 탈주체화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된 현실이 결국 인구와 환경에 대한 관리·통제·제어의 권력 작용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3) 빅데이터, 주체와 일상의 데이터화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빅데이터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느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 시대의 화두를 이루고 있다(한겨레, 2017, 11, 30). 물론 이 자리에서 그 면면을 다 살펴보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게 사실이다. 대신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떤 매개적 환경을 구축하고 또 어떤 식으로 권력 작용과 상호 조응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떤 형태의 사회적 짜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한국어 위키 사전은 빅데이터(big data)를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빅데이터, *n.d.*)로 정의한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대량이라는 말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세계 각지의 데이터 센터에 축적해 놓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는 기업과 정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뜻하고,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조 기가바이트씩 쏟아져 나오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뜻한다. 그리

고 가치를 추출한다는 말은 기업들이 이 정형·비정형의 데이터를 상품화하여 말 그대로 잉여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 분석이란 수많은 데이터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현실을 설명 또는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상오, 2013). 종합하자면, 빅데이터란 그 정의대로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거나 현실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¹³⁾

논의를 위해 먼저 정의부터 짚어봤지만,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용의 예들을 살펴보는 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Mayer-Schonberger & Cukier, 2013/2013).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글의 독감 확산 예측 사례일 것이다(Ginsberg et al., 2009). 구글은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검색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계속해서 축적해 놓고 있는데, 이로써 어떤 검색어가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태들과의 상관성을 유추하는 게 가능해졌다. 특정 지역에서 감기 관련 검색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바탕으로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미국 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감기 관련 검색을 정량화해서 상대적 빈도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감기와 지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내어, 다시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독감 확산 경향을 예측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수십 년 동안의 연구로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을 구글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낸 것이다.(Big Data, n.d.).

물론 이 같은 활용 사례와 적용 범위는 학문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빅데이터는 컴퓨터, 정보, 통계,

13)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가트너 사(Gartner, Inc)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데이터의 규모(volume), 데이터 입출력의 속도(velocity),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variety)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 세 가지 특징에 더해 복잡성(complexity)과 가치(value)라는 두 가지 특징이 추가되기도 한다(Gartner 2011; 윤상오 2013).

전산 등 직접적인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유전학, 천문학, 물리학, 기후학, 환경학 등의 과학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미디어학, 범죄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금융, 경영, 마케팅, 선거, 의료, 번역, 교통, 스포츠 등의 분야들에서도 여러 형태로 그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Aiden & Michel, 2014/2015). 이 모든 활용 사례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앞의 정의대로 빅데이터가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거나 현실의 변화를 예측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의가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만 쏠려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제기되고 있다(강정수 외, 2013; 김예란, 2013; 김지연, 2015). 하지만 이 글에서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열어젖힌 특유한 매개적 환경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매개 안에 있음이라는 환경 구성으로 인한 주체의 최소화와 탈주체화의 불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가령 캐시 오닐(Cathy O'Neil)은 빅데이터 분석을 '대량살상 수학무기(weapons of math destruction)'라고 비유 부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편견, 오해, 편향성을 코드화"하면서 "점점 더 우리 삶을 깊이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어떻게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향"을 산출해내는지를 폭넓게 분석한 바 있다(O'Neil, 2016/2017, 16쪽). 그녀가 제시하는 예시들은 교육, 노동, 광고, 보험, 정치 등 사회 전반에 두루 걸쳐져 있는데, 이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빅데이터 분석 중 상당수가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 차별적인 피드백 루프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

오닐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뉴욕을 포함한 미국

의 몇몇 도시들은 이전의 범죄 정책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한다. 예산과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 빅데이터 분석이 개입된다. 범죄의 유형과 발생 장소, 시간, 빈도 등과 같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이 지역들 위주로 경찰력을 배치하는 게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더 할 나위 없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치라 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이 앞서 언급한 차별적인 피드백 루프를 발생시킨다는 데 있다. 경찰들은 범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흑인, 히스패닉 지역을 위주로 순찰을 돌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들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짐으로써 다시금 그러한 경찰 활동을 (재귀적으로) 정당화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데이터와 경찰 활동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진 것이다(O'Neil, 2016/2017). 이러한 메커니즘이 현존 지배 질서의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녀의 주장을 이 글의 문제설정 안으로 옮겨본다면, 결국 쟁점은 빅데이터가 만든 (상시적·잠재적·자동적) 매개 환경과 이로 인한 주체의 최소화 및 탈주체화의 불가능성 테제로 수렴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결부되어 있는(그것을 가능케 하는) 환경에의 통치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빅데이터 분석의 공통된 특징으로 불투명성(opacity), 피해(damage), 확장성(expandability)을 제시하는데(O'Neil, 2016/2017), 이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각각 주체에게 불투명하고(개발자만 알고 있고) 특정 집단이 아닌 인구 대다수에게 영향(피해)을 미치며, 또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 전반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과도 무리 없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¹⁴⁾ 다시 말

14) 그녀는 수학자답게 사회 곳곳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학적 알고리즘

해, 위의 예시는 첫째, 주체에게서 분리된 데이터의 운동으로 인해 주체가 최소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둘째, 이러한 데이터의 피드백 루프 과정이 정확히 인구에 대한 정교한 통치(또는 관리)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더욱이 이때의 통치는 주체 개개인이 아니라 그 주체가 놓인 상황과 환경 일반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환경의 통치와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 결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체는 단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데이터 스스로 이해될 뿐 개입하고 질문하며 저항하는 탈주체화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들뢰즈가 이미 30여년 전에 지적했듯이, (관리사회에서) “개인들은 나누어지는 것(divisuels)이 되어 버렸고 집단은 표본, 데이터, 시장 혹은 ‘은행’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Deleuze, 1990/1993, 201쪽). 들뢰즈의 이 말은, 더 정확히는 빅데이터의 시대인 현재에 이르러서야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최대치를 이루게 된 것처럼 보인다. 개인, 집단, 데이터, 시장(혹은 은행)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계열은 30여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현재의 한 가운데로 곧장 치달는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계열은 빅데이터와 파생상품의 원리적 유사성을 염두에 둘 때에야 비로소 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모인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합쳐지고 나뉘지고 재조립되면서 자체의 운동성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과 금융화의 비유가 적절할 텐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인의 돈을 예적금의 형태로 보관해주는 은행과 유사하다면, 빅데이터는 이렇게 모인 수많은 개인의 돈을 기초로 새로

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한데, 그녀가 제시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빅데이터의 일상화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이토록 보편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치 권력의 측면에서 읽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논의와 차별적이다.

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각종 금융 상품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 각자가 집 안에 금고를 구비해 놓고 여기에 돈을 보관하는 대신 이를 은행에 맡겨 줌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클라우드는 돈 대신 데이터를 맡긴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은행은 이렇게 맡겨진 거대한 규모의 돈을 재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채권 등의 자산을 해체하고 재조립해 자산 그 자체가 아닌 자산의 구성 요소들을 거래하는 식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과 같은 파생상품(derivative)의 기본 원리인데(McNally 2011), 이는 단연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해 및 재조립해서 이로부터 일정한 상관성을 추출하고 또 이를 통해 잉여가치 창출을 목적하는 빅데이터 분석과 원리적인 유사성을 갖는다. 파생상품이 각종 금융 자산을 쪼개고 섞고 합쳐서 자산 그 자체가 아닌 그 구성요소들의 조합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또한 수천수만 명의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나누고 분석해서 현실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인구 통계학적 자료들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김상민, 2017).

이 가운데 개인 또는 주체는 데이터 몰(mole)을 이루는 하나의 분자(molecule)로 재정위된다. 현재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개인들은 나누어지는 것”, 곧 데이터가 된다. 바꿔 말한다면, 개인이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하는 온갖 종류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인구라는 집단적 단위로 흡수되어 개개인의 의지와 의식을 초과하는 무의식적이고 집합적인 데이터의 패턴으로 가시화된다(아즈마, 2011/2012). 그리고 이는 다시 인구를 통치 및 관리하기 위한 실증적인 준거로 되돌아온다. 인구, 곧 집단이 “표본, 데이터, 시장 혹은 ‘은행’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는 들뢰즈의 말이 이렇게 현행화(actualization)된다. 파생상품이 일상의 금융화를 이룬 것처럼(강내희, 2014; Martin, 2002), 빅데이터 또한 일상의 데이터화를 이루면서 다

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상을 그만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내고 있는 것이다(Aiden & Michel, 2014/2015). 들뢰즈의 저 말이 “관리사회에 대하여”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발화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개인의 데이터화와 인구에 대한 통치가 관리사회라는 사회적 층위와 서로 교차되고 있음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4) 사물인터넷, 사물들로 연결된 세계의 완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이르러 이러한 흐름은 더욱더 급진적이고 전방위적인 형태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사물에 탑재된 센서와 통신 칩을 통해, 이제 사물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기기와 공유하며, 또 이를 바탕으로 자체의 알고리즘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커넥팅랩, 2014; Miller, 2015/2016). 가령 냉장고에 부착된 센서는 내용물의 유통기한과 양 등을 파악해 기한이 지났거나 양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사용자 설정에 따라 바로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는 기후와 도로 상태 그리고 교통 상황 등을 파악하거나 전송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제시하고, 엔진 등 기타 부품의 이상 유무와 오일 교체 주기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정비소 예약까지 수행한다. 사물인터넷이 주거 환경과 접목될 경우, 집 안의 온도, 조명, 보안, 채광, 습도, 전원, 가스, 환기 등 거의 모든 일상적 주거 환경이 사물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최적의 상태로 조절 및 통제될 수 있다(Internet of things, *n.d.*). 업무 환경과 접목될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흐름은 현재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대략 25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김미희, 2016).

이렇듯 사물인터넷의 종류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물들로부터 산출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는 클라우드 컴

퓨팅과 그러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의 매개 환경이 동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오카지마, 2010/2011).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이 극대화를 이루고, 또한 그 역으로 사물인터넷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일상화와 내재화를 이끌어내는 식이다. 즉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가 평범한 사물들로 이루어지는 만큼 별다른 진입 장벽 없이 일상 환경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매개 환경을 말 그대로 일상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실제로 각종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까지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열어 놓은 매개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으며, 역으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또한 수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바로 그만큼 일상의 전 영역으로 촘촘히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일종의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옷, 시계, 안경 등과 같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점차 확산되어 감에 따라 이 같은 경향성은 더욱더 확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커넥팅랩, 2014; Miller, 2015/2016).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사용자의 조작과 개입을 최소화한 채 단지 사물 사이의 통신과 조정만으로 가장 최적화된 일상, 주거, 노동, 소비 환경을 이끌어낸다는 데 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로써 사용자 주체는 사물들 스스로가 자체의 알고리즘에 따라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환경 안에 놓이게 된다. 이제 주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화해 불가능한 타자성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며, 그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시시각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주체 모르개(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물들의 자동 조절 작용은 주체에게서 선택과 결정의 계기를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바로 그만큼 우연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마주침의 가능성마저도 축소시켜 버린다. 집 안의 온도는 알아서 조절되고 자동차는 스스로 길을 찾으며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건강을 체크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용자 주체는 단지 초기 설정 단계에서만 개입이 허용되며 이마저도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수준으로 한정되고 만다. 그 이후로는 어느 것도 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느 것 하나 주체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물들은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미 짜인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된다.

더욱이 사물인터넷이 그저 몇몇 사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이른바 과잉연결사회(overconnected society)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Davidow, 2011/2011), 이 같은 주체의 최소화는 단지 몇몇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게 된다. 사물인터넷이 일상의 환경 전체를 가로지름에 따라 주체의 최소화 과정 또한 이것과 맞물려 일상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될 수밖에 없다. 마치 생명체 내부의 항상성(homeostasis)과 같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체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조절되는 환경은 주체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와 함께 앞서 말한바 구성된 주체에서 구성하는 주체로의 전환 가능성을, 즉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들뢰즈의 다음 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란, 설령 순수하다고 가정된 정신이라 할지라도, 참된 것에 대한 욕망, 진실에 대한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진실을 찾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를 이 진실 찾기로 몰고 가는 어떤 폭력을 겪을 때만 우리는 진실을 찾아 나선다. 누가 진실을 찾는가? 바로 애인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 받는 질투에 빠진 남자이다. 찾기를 강요하고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는 어떤 기호의 폭력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중략) 진리는 어떤 사물과의 마주침에 의존하는데, 이 마주침은 우리에게 사유하

도록 강요하고 참된 것을 찾도록 강요한다. (중략) 대상을 우연히 마주친 대상에게끔 하는 것,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호이다. 사유된 것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마주침의 우연성이다 (Deleuze, 1964/1997, 40-41쪽, 이하 강조는 인용자).

들뢰즈는 애인의 거짓말이 그/그녀로 하여금 진실을 찾게 강요한다고 말한다. 애인의 거짓말 앞에서 그/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머리가 터지도록 사유할 수밖에 없다. 그전까지 평화롭기만 했던 일상이 애인의 거짓말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그녀는 이 사건이 강요하는 사유의 폭풍 속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므로 사유는 평화롭지 않다. 사유는 참된 것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평화를 빼앗는 폭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들뢰즈는 사유와 존재의 순서를 뒤집어서, 사물 또는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이 먼저 존재하고 바로 이로부터 그것과 결부된 사유가 촉발된다고 보는 셈이다(물론 이는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뒤집어 보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즉 마주침의 우연성이 사유의 필연성을 보장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 마주쳤을 때에야 그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비로소 사유라는 것을 하게 된다. 바꿔 말해서, 이는 우연적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마주침이 없다면(축소 또는 통제된다면), 결국 사유의 계기와 진실의 추구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사물인터넷은 자체의 알고리즘에 따라 철저히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 우연적 사건의 발생과 그 사건과의 마주침이야말로 사유를 촉발하는 조건이라 한다면(Althusser, 1994/2012), 온갖 종류의 사물인터넷으로 둘러싸인 일상 환경은 결국 그것과는 정반대의 조건을 창출해 낼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은 우연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으로 한정시켜 버린다. 가능한 행위의 영역은 (마치 네비게이션처럼) 항상-이미 계산되고 구조화되며, 이러한 행위의 인도가 더 편

리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당연하게도 바로 그 관리와 통제의 폭과 깊이만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발생과 그 사건에 마주칠 기회 역시 제한되거나 축소되고 만다.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집 내부는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외부 소음이 차단되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식이다. 그 안에서 개인들은 외부에 어떤(우연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약간의 날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했던 과거에 비하면 이것은 분명한 발전이자 진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들뢰즈의 논의대로라면, 이 같은 환경은 우발적 사건의 발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사유의 우연한 계기마저도 함께 축소시켜 버리고 만다. 즉 마주침의 우연성이 통제됨으로 인해 사유의 필연성 또한 위태로워진다.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기술의 발전이 도리어 인간을 무능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해 묘사하면서, 여기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Carr, 2010/2011)이라는 도발적인 표제를 붙인 바 있다. 디지털 환경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산만하고 망각하기 쉽고 분산적인 형태로 바꾸어냄에 따라 결국 사유의 폭과 깊이 또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매개적 환경 구성의 변화에 따른 사유 체계의 상관적 변화이다. 사물인터넷의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개인은 환경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화=예속화의 주체로만 남게 될 뿐, 우연한 사건과의 마주침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또 거기에 개입하는 탈주체화의 주체로 서지 못하게 된다(Badiou, 1989/2010). 구성적 주체의 계기가 사라지면서 구성되는 주체만 남게 되는 셈이다. 디지털 의존증이라 불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민경배, 2005; Rumsey, 2016/2016).

4. 인터넷과 환경관리권력 그리고 관리사회

1) 환경관리권력(Environment Power)에 대하여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ICBM)¹⁵⁾이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환경 구성과 이를 통한 관리 및 통제의 메커니즘을 이 글은 특유한 권력의 효과 및 이와 결부된 합리성의 체계로 이해하고자 했다.¹⁶⁾ 그 작동 메커니즘을 개념 안에 담아서 '환경'관리 권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푸코의 논의로부터 빌려온 것이지만, 더 엄밀하게는 그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할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다.¹⁷⁾ 푸코는 환경에의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분석의 지평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규율적인 사회, 즉 그 내부에서 사법적 망이 개인들을 속박하면서 규범적 메커니즘으로 교체되고 내적으로 연장되는 사회의 이상 혹은 기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

15)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머리글자를 뜻한다.

16) 여기서 합리성은 혼란 이해처럼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본문의 합리성은 "어떤 실천들을 지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런 실천에 통합되어 있는 동시에 이런 실천들을 가로지르는 이해가능성"(Pasquino, 1979/2014, 365쪽)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특정한 실천들을 다른 형태가 아닌 바로 그와 같은 형태로 이끌어내는 원리적 준거를 일컬어 합리성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과거에는 체벌이 합리적인 교육 실천이었던 반면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그러한 실천들을 가능케 하는 합리성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7) 이 글은 통치성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역사, 그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통치성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푸코(STP, NB)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적용으로는 서동진(2009), 사사키(2008/2015), 사카이(2001/2011), 오모다 외(2007/2015), Barry, ed., (1996), Burchell, ed., (1991/2015), Dean(1999), Gordon(1991), Lemke(2002), Rose & Miller(1992) 등을 참고할 것. 또한 통치성의 문제설정을 현재적인 차원에서 읽어내기 위해 관리권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를 인터넷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승일(2017)의 2장을 참고할 것.

반적인 규격화의 메커니즘 및 규격화할 수 없는 것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지평에서는 차이의 체계가 최적화되는 사회, 변동하는 절차에 그 장(영역)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회, 개인들이나 소수자들의 실천에 관용을 보이는 사회, 게임 참가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과 관련해 작용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NB, 364-365쪽).

바로 이 대목에서 규율권력과 환경관리권력의 대비가 뚜렷하게 쟁점화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규율권력은 감시, 처벌, 규칙, 명령, 훈육, 위계 등의 규범화 전략들을 통해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P; HS). 규율권력이 포드주의 축적체제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포드주의의 위기와 함께 (규율권력 또한) 자체의 실효성을 잃게 되었음은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사토, 2009/2014; Fraser, 2008/2011; NB). 규율권력에서 관리권력(또는 통치성)으로의 이행이 한편으로는 포드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로의 이행과 맞물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은 장치로 표현되고 장치는 권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산업장치에서 정보장치(인터넷)로의 이행과 맞물려 있는 까닭에,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서로에게 의존적인 형태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Mason, 2015/2017). 거칠게 말해 포드주의, 규율권력, 산업장치의 계열에서 신자유주의, 관리권력, 정보장치의 계열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등장한 관리권력은 규율권력과 달리 관리, 조절, 제어, 유도(誘導), 자조(self-help), 책임 등의 자유화 전략들을 통해 자기 통치와 자기 책임의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사이토, 2005/2011; Fraser, 2008/2011). “조작하고 불러일으키며 조장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즉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STP, 477쪽). 규율과 훈육의 절차들이 관리와 조절의 메커니즘으로 (경향적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와 함께 자유가 전면이 부상하게 되면서 통치의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 또한 바로 그 자유에 대한 관리와 조절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규율적인 사회”, 즉 “개인들을 속박하면서 규범적 메커니즘으로 교체되고 내적으로 연장되는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은 차이가 최적화되고 자유방임이 권장되며 개개인들에 대해 관용이 요구되는 사회이자, 이를 위해 개개인의 신체가 아닌 개인들을 둘러싼 환경에 개입하고 그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조절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환경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푸코가 말하는 환경의 맥락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게리 베커(Gary Becker)와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등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의 범죄학 논의를 토대삼아 신자유주의와 환경 개입의 실천을 하나의 실태로 꿰어낸다. 그는 신자유주의 범죄학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첫째는 범죄학에서 “인간학적 의미가 소거”(NB, 363쪽)됨으로써 점차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인구의 통계적 분포와 범죄의 확률적 발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그 결과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NB, 365쪽)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범죄학에서 범죄는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제적 주체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때문에 범죄자 역시 타고난 비정상성을 가진 악인(homo criminalis)이 아니라 인간학적 의미가 소거된 경제적 인구 일반(homo economicus)으로 재설정된다(Pasquino, 1979/2014). 그리

고 이처럼 범죄가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 재정의 됨에 따라 그 대책 역시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감시 등의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보다는 점차 인구를 둘러싼 환경의 배치와 구조를 관리·통제함으로써 “범죄의 공급곡선과 부정적 수요곡선 간의 균형”(NB, 359쪽)을 맞추는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된다. 신자유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형벌체계 자체가 관여하게 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그런 유형의 행동을 생산하는 사람들”이기에, “형벌체계는 범죄의 공급에 대처”하는 식으로, 즉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사전에 범죄의 공급을 차단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NB, 354쪽).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 (환경) 범죄학은 범죄 자체의 소멸을 지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완전한 갱생과 교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Garland, 2001). 불가능한데다가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것은 “범죄의 공급곡선과 부정적 수요곡선 간의 균형”을 목표로 삼으면서 범죄율을 허용 가능한 수준 아래로 묶어두는 식으로 이전의 전략을 수정해 나갔다. 이를 위해 선택된 전략이 바로 앞서 언급한 환경에의 개입 전략이고 또 자유화 전략이다(O'Malley, 1992; 박승일, 2015). 이 둘은 사실상 불가분한데, 범죄를 유발할만한 환경 및 상황 변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죄 억제력을 높이는 전략은 기존의 훈육과 명령, 처벌 등과 같은 규범적 기제 대신 개인의 합리적 선택, 리스크 관리, 자기 책임 등의 자유화 기제들을 동원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가운데 환경이란 그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철저히 개입해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자 이를 통해 주체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치적 전략의 장으로 재자리매김된다(O'Malley, 1999).

그런데 환경에 대한 이 같은 정의가 과연 범죄학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범죄학에서의 환경 개입적 실천은 신자유주의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만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사카이, 2001/2011; 사토, 2009/2014; NB). 실제로 푸코는 환경 개입의 실천을 범죄학만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종별적 특징으로까지 확대 정의하고 있다. 우선 그 이유부터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그 말 그대로 새로운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금 시장에 기대고자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적극 허용하고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쟁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이기도 하다(NB). 그렇기에 진정 신(neo)자유주의(liberalism)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국가의 개입이 이전의 케인스주의와는 달리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을 이루는 제반 조건들, 곧 시장의 법, 제도, 규칙 등과 같은 환경을 향한다는 것이다(사토, 2009/2014; NB). 케인스주의가 시장 그 자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고용율을 높이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 왔다면,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건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쟁을 조장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쟁 논리를 사회 각 부분으로까지 지속 확대해 왔다. 즉 시장의 내용이 아닌 시장을 이루는 형식에의 개입이라 할 수 있다(NB). 경쟁이란 시장에 내맡긴다고 해서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건과 환경에 개입해 인위적으로라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도입하여 노동자들끼리 정규직을 놓고 경쟁하게 만드는 식이다. 신자유주의를 “적극적 자유주의”이자 “개입하는 자유주의”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NB, 197쪽).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나 축소가 아니라, 혹은 그렇게 보일 때조차도, 실질적으로는 통치 방식의 전략적 변화이자 새로운 합리성의 구축인 셈이다(지주형, 2015; Harvey, 2007; Munck, 2005).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는 이상의 논의를 정보통신기술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다. 범죄학에서 논의되던 환경은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영역으

로까지 그 외연이 넓혀지게 된다. 그 역시 들뢰즈의 관리사회론에 기대어, 앞서 논의한 규율권력에서 관리권력으로의 이행을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규율권력과 달리 관리권력은 일상 환경을 이루는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개입과 관리를 통해 개인과 인구의 사고 및 행동을 제어·인도·촉발하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 환경의 형성으로 인해 더욱더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환경 관리형 권력(環境管理型權力)”이라고 명명하고(안찬, 2013, 41쪽), 이것이 이전처럼 권력의 내면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의 최적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무인 발권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경우, 그 앞에 선 개인은 자동 알고리즘의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그저 기계적으로 이끌려질 뿐이다. 여기에 협상이나 소통의 여지 따위는 없다. 그저 물리적 요소의 통제와 관리만으로 사용자의 사고와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해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권력의 작용을 일상 환경 전체로까지 확산 및 착근되게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어디서나 관리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통치의 자동화는 정보화 사회에 이르러서야 그 최대치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 한편, 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는 아즈마 히로키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신자유주의의 통치 영역 전반으로 확장한다(사토, 2009/2014). 사실 푸코의 논의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환경 개입의 원리가 범죄학만도 정보화 사회만도 아닌, 신자유주의 전체를 특징짓는 중별적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토의 논의 또한 이러한 논리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18세기에 등장했던 규율 권력이 20세기에서 복지국가적 통치와 밀접하게 결합되는 형태로 규율적 주체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복지국가의

‘종언’과 더불어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권력은 어떤 기법에 기초해 행사되는 것일까?(사토, 2009/2014, 60쪽).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포드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경향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그것과 연동되어 있던 규율권력 또한 새로운 권력의 기법으로 대체되어 갔음에 주목한다. 사토는 한편으로는 푸코의 사유를 충실히 소개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문제제기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유 체계 속에 융해시키면서, 이 질문을 신자유주의와 권력이 라는 문제들로 새롭게 구성해낸다. 규율권력에서 환경 개입 권력으로의 전환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신자유주의적 권력은 개개인의 내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이 놓여 있는 ‘환경’ 또는 그 게임의 규칙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환경을 균형화·최적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개개인에게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개입해 그 게임의 규칙을 설계함으로써 환경의 최적화를 꾀하고자 하는 권력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권력을 규율 권력에 반해 ‘환경 개입 권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사토, 2009/2014, 71쪽).

사토의 주장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일맥상통하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과정과 맞물려 있는 권력의 성격 변화를 논하면서 이를 “환경 개입 권력(環境介入權力)”으로 특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푸코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 개념은 그 대역폭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에 걸쳐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보화 시대 이후로까지 애초의 문제설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내지 보완 작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박승일, 2017; Fraser, 2008/2011). 통치성의 문제설정을 이

어반하면서도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즈마의 “환경 관리형 권력”이나 사토의 “환경 개입 권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푸코는 환경(milieu)를 “일련의 우연적인 요소들이 전개되는 공간”(STP, 48쪽)으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를 따른다면 환경 관리 또는 환경 개입이란 결국 우연성의 공간, 즉 아직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개입하여 이를 설명·예측·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어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특정한 형태의 권력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정의 행위 또는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둘러싼 환경 영역에 개입하고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권력의 주된 전략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이때의 개입과 관리가 공간의 내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공간을 이루는 형식과 조건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이처럼 환경(milieu)이 통치 가능한 장(場)으로 정의되는 한, 그것은 시장 환경이나 범죄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 자기계발, 교육 환경 등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environment)으로도 얼마든지 번역 가능하다(STP, 48; 사토, 2014: 73). “환경에 개입해 그 게임의 규칙을 설계하는” 식으로 권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환경관리권력은 아즈마와 사토의 논의를 따르면 서도 이 둘의 주장을 절충적으로 조합해서 표현한 것이다. 다만 관리사회와의 연관성을 개념 안에 담기 위해서 ‘개입’ 대신 ‘관리’라는 표현을 명시했을 뿐이며,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환경관리권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푸코가 경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유할 수 없었던 1980년대 이후의 상황,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서 웹2.0 시대를 거쳐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에 이르는 정보화 ‘환경’의 흐름을 분석의 중심에 놓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의 ‘관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러한 환경 구성과 상호 조응하면서 자체의 합리성을 사회 말단에까지 관류시켜 나가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이고도 정제적인 필요와 요청에 따라, 통치성이라는 도구상자로부터 환경관리권력의 문제설정을 추출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Foucault & Trombadori, 1999/2010).¹⁸⁾

2) 관리사회, 환경을 관리하라.

전술했듯이, 신자유주의의 재구조화와 함께 통치의 양상 또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의 형태로 점차 변모되어 갔다. 단연 그것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내면에 작용하던 이전의 규제양식은 이데올로기적 동일시를 이루기 위해 서라도 끊임없이 체제 내화의 기제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es)를 통해 개개인을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지배 질서를 재생산하게 만드는 식이다(Althusser, 1995/2007). 그만큼 시간과 수고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통치의 기제로 삼는다면, 즉 특정한 환경 구성의 전략을 통해 그 안에 속한 인구 전체를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포섭해 낼 수 있다면, 굳이 이전처럼 권력의 내면화를 목적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권력의 작용 자체를 (정보화 환경의 구성과 같은) 세련된 테크놀로지와 기술적 합리성으로 포장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사토, 2009/2014; Lazzarato,

18)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현대의 인터넷 환경에 적용한 연구로는 디지털 통치성(Digital Governmentality), 전자 통치성(Electronic Governmentality), 알고리즘 통치성(Algorithmic Governmentality) 등의 논의가 있다(Badouard et al., 2016; Metha et al., 1998; Rouvroy et al., 2016). 그러나 본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매개적 환경의 통치라는 현대적 맥락에 맞게 (환경관리권력으로) 전용했다는 점에서 이 논의들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2014/2017; NB). 그럼으로써 권력을 그만큼 일상화 혹은 배경화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이 나타”(NB, 365쪽)나고 있다는 푸코의 지적과 일맥상통한 논의이다.¹⁹⁾

다시 말해 환경관리권력은 주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단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작용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통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주체의 선택과 동의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를 대신할만한 자동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러한 환경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통제·제어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통치라는 관점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쟁 원리를 충분히 내면화하지 않더라도, 혹은 이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더라도, 적어도 그 환경적 짜임 안에 속해 있는 한 부득불 포섭될 수밖에 없는 구조, 신자유주의가 환경관리권력으로 특징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앞서 논의했듯이 환경관리를 통한 통치 전략은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영역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와 비경제를 막론한 여러 상이한 영역들이 ‘환경’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점차 통치의 논리 회로 속으로 수렴되어 가는 양상이라 하겠다. 범죄 정책이 그러했듯이, 정보통신기술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그 출발부터 서로에 대해 조건이 되고 또 동시에 조건을 부여 받는 형태로 형성 및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Castells, 1996/2003; Dyer-Witheford, 1999/2003; Harvey, 2005/2007; Schiller 1986), 인터넷을 이루는 환경적 요소들에는 신자유주의의 환경 개입주의

19) 푸코의 알튀세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IFDS). 푸코는 결국 이데올로기적 주체화(=예속화) 대신 환경의 최적화를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더 경제적인 권력의 행사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적 전략과 그것을 지탱하는 합리성의 체계가 얼마든지 반영 및 투사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의도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효과가 산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가운데 앞 장에서 서술한 변화의 흐름(평평화 단계부터 사물인터넷까지)을 애초부터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내 고자 했던 어떤 단일한 주체나 집단을 상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종적인 설계자나 명령자 혹은 (의도와 목적을 가진) 권력의 소유주 따위는 없다(HS; IFDS). 이 글에서 매개적 환경의 역사적인 변용 과정을 짚어봤던 것은 이러한 경향적 변화와 신자유주의의 환경 관리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교차되고 결합되면서 (그 우연적인 효과로) 현재적 짜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지, 반대로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이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매개적 환경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만일 후자처럼 이해할 경우 현재적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손쉽게 전가하는 것이 되고 만다.

물론 인터넷 장치가 관리사회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제인 것은 아니다. 관리 메커니즘은 이를테면, 병영 관리, 학사 관리, 질병 관리, 범죄 관리, 자산 관리, 경영 관리, 소비자 관리, 인적자본 관리, 행정 관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두루두루 적용되고 있다. 실로 지배에서 관리로의 이행은 신자유주의 전반을 특징짓는 요소라 할 만하다.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비용 대비 편익이 높기 때문이다. 단연 그만큼 여러 ‘장치들’의 복합적이고도 중층적인 작용이 존재한다. 다만 이 글이 인터넷에 주목한 이유는, 인터넷 장치가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일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자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형태로 자리매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인터넷 사용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시공간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으며, 심지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과 무관하게 항상-이미 데이터에 대한 수집·분석·처리 등의 형태로 개입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디폴트 세팅(default setting)과 같은 환경 설정을 통해 그야말로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Galloway, 2012; Lessig, 2006/2007),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치 테크놀로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운데 환경관리권력은 (시장의 조건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조건이라 할 만한 기술적 요소와 제도, 규칙 등에 개입해 이를 환경 관리라는 합리성의 체계로 재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치의 최적화와 자동화를 산출해낸다는 점에서, 진정 최소 개입의 최대 권력이라 할 수 있겠다(사토, 2009/2014; NB). 인터넷과 환경관리권력이라는 이 글의 제목이 이렇게 하나의 문제 설정으로 (재)확인된다.

그렇다고 할 때, 결국 문제는 장치와 권력의 이 같은 상호침투 관계가 과연 그 결과로 어떠한 사회적 짜임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있다. 본문에서 논의한 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전환이 상시적 매개 공간을 열어젖혔다면, 그 다음 단계인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처리·활용할 수 있는 투명성의 환경을 구축했고, 빅데이터는 집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 및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사물들 스스로 우연성의 요소들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이전과는 다른 특유한 환경 구성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각종 인공지능 장치들로 둘러쳐진 근(近)미래의 환경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실로 매개적 환경의 일상화이자 편재화이며, 그러한 환경에의 불가피성이다. 이제 매개 바깥의 시공간은 정전, 재해, 전쟁 등의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만 현시될 수 있는 일종의 예외상태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를 ‘매개 안에 있음’과 대비시켜 ‘매개 바깥의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 글이 Y2K로부터 논의를 시작했던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매개의 바깥이 곧 과국과 다를 바 없으며 (또는 그렇게 상상되며) 우리가 이미 그러한 외부 없음의 토대 위에 선택 불가능한 상태로(또는 불가역적인 상태로) 놓여

있음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바로 웹 환경을 포함해 무선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그리고 사물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매개 안의 있음의 환경인 것이며, 또 그러한 환경에의 관리로 특징되는 사회적 짜임인 것이다.

관리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짜임을 사후적으로 명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용자 주체의 최소화와 환경적 요소의 극대화라는 급진적인 설정으로까지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주체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화되는 만큼 그 빈자리는 인터넷 환경의 자동화·최적화·지능화·융합화로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이 단적인 예일 것이다. 즉 주체에의 의존 없이 단지 환경적 요소에 대한 개입과 관리를 통해 최적의 통치 효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적 짜임이 기술적 합리성의 이름으로 전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회는 우연성의 인터넷 환경에 개입해 이 가운데 규칙과 질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시 이 환경을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어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환경 속 주체들의 사고와 행동을 특정한 방향과 형태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체들의 개입 가능성과 탈주체화의 계기마저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정교한 환경 관리의 사회이자 종국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결과 이러한 환경 구성은 권력의 작용을 마치 그림의 배경처럼 일상 속 사고와 행위 속으로 스며들게 만든다.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점차 사물화·일상화·배경화된다. 물론 배경화가 권력의 약화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권력이 배경화됨으로써 사용자는 어떤 구속이나 제약도 없는, 말 그대로 자유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즉 자유라는 이름의 권력에 둘러싸이게 된다. 바꿔 말하면 권력은 자유를 조건으로 자체의 최대치를 달성하게 된다 (Foucault, 1982). 자유롭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이기까지 한 권력, 권력

으로서의 인터넷이 갖는 특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관리권력은 사용자에게 더 없는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단지 그들을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항상 매개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듦으로써 그 환경 내의 인구 전체를 통치의 자장 안으로 포섭해 낸다.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매개적 공간으로 변형됨에 따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항상-이미 연결되어 있기에) 사용자가 얼마나 자유롭고 능동적인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통치의 효과가 산출되는 기반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통치와 자유는 서로 포개지면서 그만큼 환경 구성의 함수가 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게다가 이러한 매개 환경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드, 알고리즘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의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자동화 메커니즘에 따라 구동되는 까닭에(Galloway, 2012; Lessig, 2006/2007), 이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과 필요성마저도 최소화해버리고 만다. 권력이 특정한 형태의 환경 구성을 통해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내적인 논리, 즉 코드와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작동한다고 한다면, 결국 환경의 설계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환경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사용자 주체는 피동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Y2K는 그 원인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있었던 탓에 단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바꿔 말하면 이는 알고리즘 오류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정은 다른 인터넷 장치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이 본문에서 논의한 바 탈주체화 가능성의 약화화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권력이 환경을 통해 작동할 때 주체는 과연 이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권력과 저항이라는 오래된 논의를 새로운 맥락 속으로 다시 불러들인다(사카이, 2001/2011; 사토, 2008/2012; Bensaid, 2001/2003).

3) 노동의 사회화와 이윤의 지대되기

마지막으로 ‘노동의 사회화’와 ‘이윤의 지대되기’라는 현상(또는 원리)을 환경관리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¹⁾ 결론을 당겨 말하자면, 이 두 현상은 지금까지 논의한 매개적 환경 구성이 일차적으로는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의 고유한 전략이지만,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잉여가치 메커니즘 및 포섭의 전략과 불가분하게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Vercellone, 2007a). 권력의 현실적인 작동 메커니즘과 자본주의의 축적 전략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중첩된 관계맺음이야말로 현존 질서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Bichler & Nitzan, 2002/2004; Pasquinelli, 2011/2012). 포드주의적 규율권력의 현실적인 작동 방식이 상대적 잉여가치의 메커니즘 및 실질적 포섭의 전략과 긴밀히 연동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Marx, 1857/1988; 1867/2009). 환경관리권력의 경우에는, 규율 대신 환경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권력과 가치화 그리고 포섭의 요소들이 선회하고 또 서로 교차되면서 그에 걸맞은 문제설정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노동의 사회화와 이윤의 지대되기는 다른 무엇보다 환경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자체의 가치화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관리권력의 내적 논리와 일정한 친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먼저, 노동의 사회화는 공장에서의 잉여가치 생산만으로는 자본주의

20) 글의 목적상 여기에서는 문제만 제기하고 권력과 저항이라는 논의로까지 이어가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저항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사토(2008/2012)와 벤사이드(2001/2003)를 참고할 것.

21) 환경 구성의 원리와 신자유주의의 가치화 전략을 함께 다루는 논의는 찾아볼 수 있어도, 이 두 항목을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풀어내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령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 논의의 경우 플랫폼이라는 기반 환경의 특수성과 자본주의의 초점 변화를 상호 연관된 것으로 설명하지만(Srnicek, 2017), 정작 그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권력의 복잡다단한 작용, 그 메커니즘과 전략,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를 지탱할 수 없게 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구조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등장했다(Negri, 2005/2012; Dyer-Witheford, 1999/2003). 노동의 사회화이자 공장의 사회화이며, 더 정확히는 일상의 (잉여)가치화이다. 요컨대 그것은 공장의 생산 논리를 사회 전체에 이식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활동 전반이 노동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를 생산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일상과 노동의 경계는 흐릿해졌으며 비노동자와 노동자의 경계도 불분명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만큼 잉여가치의 창구는 공장의 문을 넘어 일상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 전체로, 그리고 비노동자와 노동자를 포함한 인구 전체로 확대 및 침윤되어 갔다(Hardt & Negri, 2000/2001). 가치생산의 외부화라는 말로 간명하게 정리해볼 수 있겠다(Marazzi, 2009/2013). 수용자 상품론이 노동의 사회화 테제로 흡수 및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인구는 기업의 가치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자원으로 포섭되기 때문이다(Smythe, 1977). 가치 창출의 원천은 결국 노동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일상적인 미디어 소비 행위는 몇 단계의 가치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 행위로 변환되고 만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텔레비전 시대를 지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이르러 일상의 모든 시공간 속으로 더욱더 가열하게 밀어붙여지고 있다(Andrejevic, 2009; Terranova, 2000).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수용자의 일상적인 미디어 소비 행위를 곧장(또는 몇 단계를 거쳐) 잉여가치 생산 행위, 곧 노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틀이나 매개, 기반시설 혹은 장치가 그 사이에 기업되어 있어야만 한다(Berardi, 2009a/2012). 일상적 행위가 저절로 노동으로(잉여가치로) 전환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그러했고 웹2.0 이후의 인터넷이 그러하며, 앞서 논의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또한 그러하다. 특히 현재로서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이름인 플랫폼이야말로 가장 일상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Srnicek, 2017). 현대의 인터넷 기업들은 다양한 층위의 플랫폼을 제작 및 선점해 놓고 사용자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윤이 발생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김동원 2015; 2016; Srnicek, 2017). 플랫폼과 같은 구체적인 기반시설 혹은 장치의 매개를 통해서야 비로소 일상 행위들이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으로 연결 및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현대판 지대(地代)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주가 단지 토지의 소유로부터 소득(지대)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Marx, 1894/2009), 플랫폼 기업 또한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로부터 비롯되는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 및 콘텐츠를 기업 자신의 소득으로 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기업들은 수많은 사용자가 생산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김동원, 2015; 백옥인, 2014; 이항우, 2014; Berardi, 2009a/2012; 2011/2013).

그러나 파스퀴넬리(Matteo Pasquinelli)의 지적대로 이 가운데 “이용자들은 콘텐츠 생산과 웹 경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놓이지만, 어떠한 이윤도 공유하지 못한다”(Pasquinelli, 2008/2013, 174쪽). 현대의 인터넷 기업들은 마치 석유 회사가 석유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은 채 단지 그 추출과정에만 돈을 지불하듯이,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액만 지불하거나 이마저도 사용자가 얻는 만족감과 맞바꾸는 형태로 이를 독점하며 오직 플랫폼을 개발·유지·확장하는 데에만 돈을 지불한다(Lambert, 2016). 실로 이들 기업은 “어떠한 콘텐츠도 생산하지 않고 이윤을 추출한다”(Pasquinelli, 2008/2013, 175쪽). 이처럼 사용자의 다양한 웹 활동이 기업의 수익 메커니즘으로 흡수된다고 한다면, 이때의 웹 활동들은 결국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노동이자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부불 노동에 다름 없게 된다(강남훈, 2008; 이항우, 2015). 사용자는 각종 웹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기

실 여기에는 사용자의 관심과 노력, 아이디어, 지식 생산, 소통, 협력, 사회적 관계 등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부지불식간에) 지불되고 있으며, 때문에 다양한 웹 활동은 (잠재적인 의미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Fuchs, 2010; Hesmondhalgh & Baker 2016; Scholz, 2012).

이런 의미에서 이윤의 지대되기는, 과거에는 이윤이나 임금에 비해 기생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지대 소득이 점차 전면화되고 있는 양상을 정확히 포착해서 보여준다고 하겠다(Marazzi, 2009/2013; Vercellone, 2007b). 노동이 사회화되는 경향과 맞물려서, 일상적 행위로부터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지대 형태의 가치화 전략 또한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Andrejevic, 2009; Fuchs, 2012; Negri, 2005/2012;). 즉 “이윤과 포드주의 공장의 관계는 지대와 확산된 ‘사회적 공장’의 관계”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Pasquinelli, 2008/2013, 173쪽). 바꿔 말한다면 노동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라도 이윤은 지대와 같은 환경 형태로 바뀌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토지라는 환경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행위 전반이 잉여가치를 산출하는 노동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과거의 지대가 토지라는 당시의 환경 구성을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밀어붙여진 현대적 의미의 지대 또한 현재의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인터넷 환경 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토지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맞게 온라인 환경(=토지)으로 변형된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의 평평화 단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보화 환경의 형성은 결과적으로 이윤의 지대되기가 최대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와이파이와 스마트폰이 열어 놓은 상시적 매개 공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가능케 한 잠재적 연결 상태, 사물들이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동화의 세계, 이 모든 환경 구성은 이것이 (무료 혹은 저가로) 운용되기 위해서라도 환경 그 자체에

서 발생하는 이윤 체계와 결합될 필요가 있었다. 매개 안에 있음이라는 정보화 환경의 구성과 이윤의 환경(=지대)되기가 이렇게 연결되며, 이는 다시 비용-편익의 논리에 따라 이러한 환경 설계를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권력의 합리성과도 연결된다. 즉 ‘환경’이라는 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잉여가치 매커니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통치 전략이 일정한 궤를 이루면서 서로 긴밀하게 얽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주장대로 이러한 얽힘(짜임)을 관리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 결국 이로써 우리는 인터넷과 권력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읽어내겠다는 애초의 문제설정을 논의의 말미에 이르러 재차, 그러나 더욱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며

논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자.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 열 가지 동력부터 그 효과를 일상적인 층위로 확대시킨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가로지르는 변화의 흐름은 201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새로운 흐름, 즉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상시적이고 잠재적인 매개 환경으로 재편해 내고 있다. 실로 우리는 매개 안에 있으며, 더 정확히는 그럴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은 처음에는 인위적인 개입의 형태로 등장했지만, 이후 점차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다가 이제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처럼 눈앞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름 너머 어딘가에 모조리 수집되고 저장된다. 그 정보는 다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잉여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현실을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가운데 사물들은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물들만의 자동 조절 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주

체가 매개 환경의 자동화된 알고리즘 속으로 흡수되어 감에 따라, 주체의 존재와 역할이 약화되는 바로 그만큼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탈주체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또한 더불어 약화되고 있다. 가령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 대신 각종 인구 통계와 데이터가 공공 서비스 정책 수립 과정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식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통치 권력의 질서 및 안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 이미 권력이 행사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테크닉, 메커니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매개 안에 있음의 환경 속에서 점차 주체의 자리와 역할이 자동화된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현실은, 결국 권력의 현실적인 작동 메커니즘이 그러한 형태와 방향으로 사회(적 짜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관리권력과 관리사회의 문제설정이 이렇게 도출된다.

이 가운데 쟁점은 인터넷을 둘러싼 환경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통치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매개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통치의 자동화가 일상적인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 조건에의 개입을 통해, 즉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 없이 그저 상시적 접속 상태 안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개인과 인구의 통치를 이루어낸다는 점에서(인터넷에 연결된 주체는 항상-이미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구이다), 그만큼 덜 직접적이고 덜 내용적이며 또한 더 기술(자동)적이고 더 형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큰 틀에서는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작동하지만, 즉 정보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인터넷 사용 인구의 사고와 행동을 인도하고 제어하지만, 동시에 그 내부적으로는 사용자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생산을 이끌어내고 또 그럼으로써 스스로 통치의 회로를 가동시켜 나가게 하는 식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권력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매개적 환경 구성이 처음에는 인위적이고 선택 가능한

형태로 도입 및 전개되었던 반면, 이제는 점차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 조건으로 배경화되면서 그 자체 자연적이고도 선택 불가능한 소여의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당장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연결되는(그만큼 자동으로 관리되는) 정보화 환경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빼곡히 들어선 빨간색 부채 모양의 와이파이 표시는, 진정 일상적 공간 전체가 그대로 인터넷의 매개 안에 놓이게 되었음을, 그리하여 그 안의 사람들 또한 항상-이미 과잉 연결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당연하게도 이와 결부된 권력의 실제적인 작용, 곧 권력이 행사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식, 기법, 전술 역시 일상적 테크놀로지와 기술적 합리성 속으로, 그리고 이 모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 속으로 시나브로 내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랏자라또(Maurizio Lazzarato)는 사회적 복종(social subjection)과 기계적 예속(machinic enslavement)을 구분하면서, 랑시에르(Jacques Ranciere)와 바디우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주체성의 생산을 사회적 복종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해 왔다고 비판한다(Lazzarato, 2014/2017). 사회적 복종이 주체들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위치와 역할을 (재)생산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기계적 예속은 시스템의 “각종 변수를 예속(제어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전체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자 이를 통해 “기술적 또는 사회적 기계를 통제하고 조절(통치)”하는 권력의 양식을 의미한다(Lazzarato, 2014/2017, 34쪽).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기술적 예속의 계기 또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반해²²⁾, 권력의 문제설정은 여전히 사회적

22) 예속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 랏자라또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면서도 기계적 통치가 과연 예속의 형태로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다. 기계적 예속이란 결국 자유와 통치의 변증법을 핵심으로 삼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속보다는 자유의 뉘앙스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자유와 통치의 상보적인 관계맺음을 ‘관리’라는 표현 안에 담아내고자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2와 3을 참고할 것.

복종이라는 (오래된) 주체적 작용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일 터이다. 물론 그가 말한 기계적 예측이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환경관리권력과 개념적 친화성을 갖고 있음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매개 환경의 관리를 통한 통치의 자동화라는 이 글의 테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지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랫자랏또의 이러한 구분은 단연 실천적인 물음을 내포하는데, 만일 주체성의 생산 또는 권력의 작용이 (사회적 복종과 기계적 예측 사이의 상보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기계적 예측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그럼으로써 전(前)개체적인 층위(또는 기술적·매개적 환경의 층위)에서의 작동을 통해 말 그대로 기계적인 예측을 산출해내고 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현재의 시급하고 근본적 질문, 즉 무엇을 할 것인가?”의 결정적 단서”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Lazzarato, 2014/2017, 30쪽).

이 글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개별 장치들을 가로지르는 권력의 내적 원리를 파악하고 또 그와 같은 벡터의 흐름을 환경관리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해내고자 했던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환경관리권력은 일상의 상시적·잠재적·자동적인 매개 환경으로 물러나 더는 보이지 않게 된 권력의 문제설정을 다시금 전면으로 끄집어내어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자, 바로 이러한 통치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받지 않을 수 있는가)를 비로소 질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Foucault, 2015/2016). 그럴 때에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마른 환상으로 점철된 현재의 담론 지형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각도와 층위에서(즉 권력과 통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통치받고 있는지를 “감히 알고자”(Foucault, 2015/2016, 50쪽) 하는 것, 이는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 당하지 않겠다는 비판적 태도, 곧 “자발적 불복종”과 “숙고된 불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Foucault, 2015/2016, 47쪽). 이 글의 목적은 “감히 알고자”하는, 바로 그것에 있다.

참고문헌

- 강남훈 (2008). 착취와 수탈. <마르크스주의 연구>, 5권 4호, 234-249.
- 강내희 (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서울: 문화과학사.
- 강정수 외 (2013).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고현석 (1999, 3, 4). '현실'로 다가오는 Y2K 악몽. <경향신문>. 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3100209110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2-31&officeId=00020&pageNo=10&printNo=24393&publishType=00010\(????%EB%85%84](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3100209110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2-31&officeId=00020&pageNo=10&printNo=24393&publishType=00010(????%EB%85%84)
- 구본권 (2015).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서울: 어크로스.
- 김동원 (2015). 이용자를 통한 미디어 자본의 가치 창출. <한국언론정보학보>, 70호, 165-188.
- 김동원 (2016). 플랫폼 담론과 플랫폼 자본: 삶정치 노동의 확장. <문화과학>, 87호, 75-97.
- 김동환·하원규·최남희 (2002).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서울: 전자신문사.
- 김미희 (2016, 12, 7). IoT 서비스 서버 한계 '클라우드'로 푼다.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612071731240003>
- 김상민 (2016). 나 자신의 데이터가 되다: 디지털 자기-기록 활동과 데이터 주체. <문화과학>, 87호, 57-74.
- 김상민 (2017). 데이터-주체의 디지털 과생상품으로서의 삶. 한국언론학회 2017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김예란 (2013). 빅데이터의 문화론적 비판: 미셸 푸코의 생정치 개념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3호, 166-204.
- 김지연 (2015). 빅데이터의 주제: 디지털 시민의 구성. <경제와 사회>, 105호, 94-126.
- 민경배 (2005, 8, 12). 디지털에 영혼도 맡길 것인가. <시사저널>.

- URL: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02698>
- 박승일 (2015).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경제와 사회>, 107호, 352-394.
- 박승일 (2017). <인터넷과 이중 관리권력 그리고 관리사회>.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옥인 (2014). 서비스 플랫폼의 전유 방식 분석에 관한 시론: '플랫폼 지대와 이윤'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4호, 174-196.
- 백철 (2011, 2, 22). 이집트 항쟁 일등공신은 '페이스북'. <주간경향>, 913호.
UR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102161532081&pt=nv>
- 서동진 (2009).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57호, 315-335.
- 선우중성 외 (1998).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지원보고서. 한국전산원.
- 심세광 (2011). 옮긴이 해제. 오토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534-565쪽). 서울: 난장.
- 안천 (2013). 익명성의 구조 전환: 붕괴하는 '사회의 전체상'과 데이터베이스. <오늘의 문예비평>, 88호, 26-47.
- 윤구현 (1999, 4, 29). Y2K 한반도전쟁 부를 수도. <매일경제>. 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3100209110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2-31&officeId=00020&pageNo=10&printNo=24393&publishType=00010\(???%EB%85%84](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3100209110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12-31&officeId=00020&pageNo=10&printNo=24393&publishType=00010(???%EB%85%84)
- 윤상오 (2013). 빅데이터의 두 얼굴: 기대와 위험. 강정수 외,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 (59-92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광석 (2013). 빅데이터 위험 정보사회의 '정보재난'의 문제점. 강정수 외,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 (33-56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광석 (2016). 데이터사회의 형성과 대항장치의 기획. <문화과학>, 87호, 26-56.
- 이항우 (2014) 구글의 정동 경제: 사용자 정동 노동의 동원과 전용. <경제와 사

- 회), 102호, 208-236.
- 이항우 (2015). 자유/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소액 결제 혹은 보편적 기본 소득. <경제와 사회>, 107호, 323-351.
- 정지훈 (2010). 거의 모든 IT의 역사. 서울: 메디치미디어.
- 정지훈 (2014).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서울: 메디치미디어.
- 정보통신부 (2000). 국가 Y2K 백서. 정보통신부.
- 조정환 (2011). 인지자본주의-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서울: 갈무리.
- 지주형 (2015). 신자유주의 국가. <경제와 사회>, 106호, 360-406.
- 진태원 (2006). 생명정치의 탄생-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 사회>, 19권 3호, 216-237.
- 최영재 (1999, 1, 28). 피부리다 재앙 부른 '2000년 쇼크': 20여년 전 드 야거 등 '양치기 소년' 경고 무시... 속도 쫓긴 인간의 업보. <시사저널>. URL: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78064>
- 최진탁 (1999). Y2K에 대한 대응책,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황해문화>, 23호, 323-333.
- 커넥팅랩 (2014).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뛰어넘는 거대한 연결 사물인터넷. 서울: 미래의창.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URL: <http://isis.kisa.or.kr/board/?pageId=060100&bbsId=7&itemId=817&searchKey=&searchTxt=&pageIndex=1>
- 한병철 (2014). *Psychopolitik*. 김태환 (역) (2015). <심리정치>. 서울: 문학과지성사.
- 齋藤純一(사이토 준이치) (2005). 自由. 이혜진 외 (역) (2011).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서울: 한울.
- 佐-木 中(사사키 아타루) (2008). 夜戰と永遠 フーコー・ラカン・ルジャンドル. 안진 (역) (2015). <야전과 영원>. 서울: 자음과모음.

- 酒井隆史(사카이 다카시) (2001). 自由論 : 現在性の系譜學. 오하나 (역) (2011).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서울: 그린비.
- 佐藤嘉幸(사토 요시유키) (2008). 権力と抵抗—フーコー・ドゥルーズ・デリダ・アルチュセール. 김상운 (역) (2012). <권력과 저항: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서울: 난장.
- 佐藤嘉幸(사토 요시유키) (2009). 新自由主義と権力—フーコーから現在性の哲學へ. 김상운 (역) (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가-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서울: 후마니타스.
- 重田園江(오모다 소노에), et al. (2007). フーコーの後で: 統治性, セキュリティ, 闘争. 김상운 (역) (2015). <푸코 이후: 통치성, 안전, 투쟁>. 서울: 난장.
- 東浩紀(아즈마 히로키) (2011). 一般意志2.0 ルソー、フロイト、グーグル. 안천 (역) (2012). <일반의지 2.0-루소, 프로이트, 구글>. 서울: 현실문화.
- 岡嶋裕史(오카지마 유시) (2010). アップル、グーグル、マイクロソフト〜クラウド、携帯端末戦争のゆくえ. 김정환 (역) (2011). <클라우드 혁명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서울: 예인.
- Agamben, G. (2006). *Che cos'è un dispositivo?*. 양창렬 (역) (2010).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 Aiden, E., & Michel, J. B. (2014).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김재중 (역) (2015).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과주: 사계절.
- Althusser, L. (1994). *Filosofia y Marxismo*. 서관모·백승욱 (역) (2012). <철학적 맑스주의: 우발성의 유물론을 위하여>. 서울: 새길아카데미.
- Althusser, L. (1995). *Sur la reproduction*. 김웅권 (역) (2007). <재생산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2006).

-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 Andrejevic, M. (2009). Exploiting YouTube: Contradiction of User-Generated Labor. *The YouTube Reader*. Logotipas. 406-423.
- Badiou, A. (1989). *Manifeste pour la philosophie*. 서용순 (역) (2010). 〈철학을 위한 선언〉. 서울: 길.
- Badiou, A. (1998). *Petit Manuel d'esthétique*. 장태순 (역) (2010). 〈비미학〉. 서울: 이학사.
- Badouard, R., Mabi, C., & Sire, G. (2016). Beyond "Points of Control": logics of digital governmentality. *Internet Policy Review*, 5(3). Retrieved from <https://policyreview.info/articles/analysis/beyond-points-control-logics-digital-governmentality>
- Barry, A., Osborne, T., & Rose, N. (Ed.) (1996).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iger, J. R. (1989).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윤원화 (역) (2009). 〈컨트롤 레벌루션: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원〉. 서울: 현실문화.
- Benjamin, W. (1936).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최성만 (역)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길.
- Bensaid, D. (2001). *Re`sistances : Essai de taupologie ge`ne`rale*. 김은주 (역) (2003). 〈저항: 일반 두더지학에 대한 서론〉. 서울: 이후.
- Berardi, F. (2009a). *The Soul at Work*. 서창현 (역) (2012). 〈노동하는 영혼: 소외에서 자율로〉. 서울: 갈무리.
- Berardi, F. (2009b). *Precarious rhapsody: semiocapitalism and*

- the pathologies of the post-alpha generation*. 정유리 (역) (2013).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보노동의 정신병리>. 서울: 갈무리.
- Berardi, F. (2011). *After the Future*. 강서진 역 (2013). <미래 이후>. 서울: 난장.
- Bichler, S., & Nitzan, J. (2002). *Capital As Power*. 홍기빈 (역) (2004). <권력 자본론>. 서울: 삼인.
- Burchell, G., Gordon, C., & Miller, P. (Ed.) (1991).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심정보 외 (역) (2015).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서울: 난장
- Carr, N. (2010). *The Shallows*. 최지향 (역) (2011).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
- Carr, N. (2014). *The Glass Cage*. 이진원 (역) (2014). <유리감옥>. 서울: 한국경제신문.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서울: 한울
- Cruikshank, B.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심정보 (역) (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서울: 갈무리.
- Dyer-Witheford, N. (1999).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신승철·류현 (역) (2003). <사이버-맑스: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서울: 이후
- Davidow, W. H. (2011). *Overconnected*. 김동규 (역) (2011년). <과잉연결시대>. 서울: 수이북스.
- Dean, M. (2009).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 edition.
- Deleuze, G. (1964). *Proust et les signes*. 서동욱·이충민 (역) (1997).

-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울: 민음사.
- Deleuze, G. (1990). *Pourparlers 1972-1990*. 김종호 (역) (1993).
〈대담 1972~1990〉. 서울: 솔
- Derrida, J. (1967). *De la grammatologie*. 김성도 (역) (2010).
〈그라마톨로지〉. 서울: 민음사.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 Foucault, M. (1976). *Il Faut Defendre La Societe*. 김상운 (역)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 Foucault, M. (2000). “Is It Useless to revolt?,”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volume.3: Power*. James D.
Faubion(ed). The New Press. p.449-453.
- Foucault, M.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1: 얇의 의지〉. 서울: 나남.
- Foucault, M. (1977) *Securite, territoire, population*. 오트르망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 Foucault, M. (1978).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오트르망 (역)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 Foucault, M.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
no. 4. p. 777-795. URL:
[http://www.unisa.edu.au/Global/EASS/HRI/foucault_-_the_s
ubject_and_power.pdf](http://www.unisa.edu.au/Global/EASS/HRI/foucault_-_the_subject_and_power.pdf)
- Foucault, M. (1984). *Histoire de la sexualité 2: L'usage des
plaisirs*. 문경자·신은영 (역) (2004).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
- Foucault, M. (1984). *Histoire de la sexualité 3: Le souci de soi*.
이혜숙·이영목 (역) (2004). 〈성의 역사3: 자기 배려〉. 서울: 나남.
- Foucault, M., & Trombadori, D. (1999). *Remarks on Marx*. 이승철
(역) (2010). 〈푸코의 맑스〉. 서울: 난장.

- Foucault, M. (2015). *Qu'est-ce que la critique? La culture de soi*.
오트르망 (역)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파주: 동녘.
- Fraser, N.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김원식 (역) (2011).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그린비.
- Friedman, T. L. (2005).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김상철·이운섭·최정임 (역) (2006).
<세계는 평평하다: 21세기 세계 흐름에 대한 통찰>. 서울: 창해.
- Fuchs, C. (2010). Labor in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o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26(3), 179-196.
- Fuchs, C. (2012). Class and Exploitation on the Internet. In T.
Scholz (Ed.),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pp. 211-224). Routledge.
- Galloway, A. R. (2012). *The Interface Effect*. Polity Press.
- Garland, D. (2001).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tner. (2011, 6, 27). Gartner Says Solving 'Big Data' Challenge
Involves More Than Just Managing Volumes of Data. Gartner
Newsroom. URL: [https://web.archive.org/web/20110710043533
/http://www.gartner.com/it/page.jsp?id=1731916](https://web.archive.org/web/20110710043533/http://www.gartner.com/it/page.jsp?id=1731916)(2017년 2월
20일).
- Gere, C. (2009). *Digital Culture* (2nd ed.). Reaktion Books
- Ginsberg, J., Mohebbi, M. H., Patel, R. S., Brammer, L.,
Smolinski, M. S., & Brilliant, L. (2009). Detecting influenza
epidemics using search engine query data. *Nature*, 457,
1012-1014.
- Gordon, C. (1991). Governmentality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 Burchell & C. Gordon & P. Miller (Ed.), *The Foucault*

-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pp. 1-51). Chicago University Press.
- Gordon, C. (Ed.)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홍성민 (역) (1995).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 Hardt, M., & Negri, A. (2000). *Empire*. 윤수중 (역) (2001). <제국>. 고양: 이학사.
- Hardt, M., & Negri, A. (2012). *Declaration*. 조정환 외 (역) (2012). <선언>. 서울: 갈무리.
-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서울: 한울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Henwood, D. (2003). *After the New Economy*. 이강국 (역) (2004). <신경제 이후>. 서울: 필맥.
- Hesmondhalgh, D., & Baker, S. (2011). *Creative Labour: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안채린 (역) (2016). <창의 노동과 미디어 산업-미디어 노동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Ingham, G. (2004). *The Nature of Money*. 홍기빈 (역) (2011). <돈의 본성>. 서울: 삼천리.
- Kittler, F. (1999). *Gramophone, Film, Typewriter*. (G. Winthrop-Young., & M. Wutz, Tr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Lacan, J. 1994. 욕망 이론. 권택영·이미선·민승기 역. 문예출판사.
- Lambert, Craig. (2015). *Shadow Work: The Unpaid, Unseen Jobs That Fill Your Day*. 이현주 (역) (2016). <그림자 노동의 역습>. 서울: 민음사.
- Lazzarato, M. (2014). *Signes, Machines, Subjectivite*. 신병현·심성보

- (약) (2017). <기호와 기계>. 서울: 갈무리.
- Lemke, T. (2002).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3), 49-64.
- Lessig, L. (2006).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Version 2.0*. 김정오 (역) (2007). <코드 2.0>. 파주: 나남.
- Levy, P. (1999). *Collective Intelligence: Mankind's Emerging World in Cyberspace*. Basic Books.
- Lukes, S. (1974). *Power: A Radical View*. Palgrave Macmillan.
- Mackinnon, R. (2013). *Consent of the Networked: The Worldwide Struggle For Internet Freedom*. Basic Books.
- Marazzi, C. (2010). *The Violence of Financial Capitalism*. 심성보 (역) (2013).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으로>. 서울: 갈무리.
- Martin, R. (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Temple University Press.
- Marx, K. (1857) *Results of the Immediate Process of Production*. 김호윤 (역) (1988).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 <경제학 노트>. 서울: 이론과 실천.
- Marx, K. (1867).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conomie*. 김수행 (역) (2009). <자본론 I- 상>. 서울: 비봉출판사.
- Marx, K. (1894).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conomie*. 김수행 (역) (2009). <자본론 III- 하>. 서울: 비봉출판사.
- Mason, P. (2015). *Postcapitalism: A Guide to Our Future*. 안진이 (역) (2017). <포스트 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서울: 더퀘스트.
- Mayer-Schonberger, V., & Cukier, K. (2013).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이지연 역. (2013).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서울: 21세기북스
- McNally, D. (2010). *Global Slump: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 Crisis and Resistance*. 강수돌·김낙중 (역) (2011). 〈글로벌 슬럼프〉. 서울: 그린비.
- Metha, M., & Darier, E. (1998). Virtual Control and Disciplining on the Internet: Electronic Governmentality in the New Wired World. *The Information Society*, 14(2).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3262117_Virtual_Control_and_Disciplining_on_the_Internet_Electronic_Governmentality_in_the_New_Wired_World
- Miller, M. (2015). *The Internet of Things*. 정보람 (역) (2016). 〈생활을 변화시키는 사물인터넷: IoT〉. 서울: 영진닷컴.
- Mosco, V. (2014). *To the Cloud: Big Data in a Turbulent World*. 백영민 (역) (2015).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정치경제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Munck, R. (2005). Neoliberalism and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Neoliberalism. A. Sssa-Filho and D. Johnston, (Ed.).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pp.60-69). London: Pluto Press.
- Negri, A. (2005). *The Politics of Subversion*. 최항석·김낙근 (역) (2012). 〈전복의 정치학〉. 고양: 인간사랑.
- Norris, C. (1988). *Derrida*. 이종인 (역) (1999). 〈테리다〉. 서울: 시공사.
- O'Malley, P. (1992). Risk, power and crime prevention. *Economy and Society*, 21(3), 252-275.
- O'Malley, P. (1999). Governmentality and the risk society. *Economy and Society*, 28, 138-148.
- O'Neil, C. (2016). *Weapons of Math Destruction*. 김정혜 (역) (2017). 〈대량살상수학무기〉. 서울: 흐름출판
- Pasquinelli, M. (2008). *Animal Spirits: A Bestiary Of The Commons*. 서창현 (역) (2013). 〈동물혼〉. 서울: 갈무리.
- Pasquinelli, M. (2011). *Machinic capitalism and network surplus*

- value: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uring machine*. 연구공간 L (편역) (2012). 기계적 자본주의와 네트워크 잉여가치: 튜링기계의 정치경제학.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159-190쪽). 서울: 난장.
- Pasquino, P. (1979). 범죄학: 특수학 지식의 탄생. 심성보 외 (역) (2014). <푸코 효과>. (pp.343-366). 서울: 난장.
- Poulantzas, N. (1978). *State, Power, Socialism*. 박병영 (역) (1994). <국가, 권력, 사회주의>. 서울: 백의.
- Rose, N., & Miller, P.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3(2), 173-205.
- Rouvroy, A., & Stiegler, B. (2016). The Digital Regime of Truth: From the Algorithmic Governmentality to a New Rule of Law. *La Deleuziana*, (3), 6-29. Retrieved from http://www.ladeleuziana.org/wp-content/uploads/2016/12/Rouvroy-Stiegler_eng.pdf
- Rumsey, A. S. (2016). *When We Are No More: How Digital Memory Is Shaping Our Future*. 광성혜 (역) (2016).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 디지털 기억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유노박스.
- Schiller, H. I. (1986).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Scholz, T. (Ed.). (2012).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Routledge.
- Shirky, C. (2008). *Here Comes Everybody*. 송연석 (역) (2008). <클릭과 쏘리고 들끓다>. 서울: 갤리온.
- Smythe, D. W. (1977). Communications: Blindspot of Western Marxis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ety Theory*, 1(3), 1-28.

- Srnicek, N. (2017). *Platform Capitalism*. Polity: 1 edition.
- Terranova, T. (2000).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Social Text*, 63(18), 33-58.
- Vercellone, C. (2007a). From Formal Subsumption to General Intellect: Elements for a Marxist Reading of the Thesis of Cognitive Capitalism. *Historical Materialism*, 15, 13-36.
- Vercellone, C. (2007b.) The New Articulation of Wages, Rent and Profit in Cognitive Capitalism. *The Art of Rent*. Queen Mary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Management.
- Weber, M. (1905).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 (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이영철 (역) (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 한겨레 (2017.11.30). 4차 산업혁명 '큰그림 1.0'...지능화기술 R&D 2조2천억 투자
UR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1476.html#csidx5a8c9a2980835418b716ee0c3e61826
- 빅데이터 (n.d.).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n.d.).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0825&cid=40942&categoryId=32828#_datalab
- 투명성 (n.d.) Retrieved fro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5XXXXXXXX994>
- 2000년 문제 (n.d.). Retrieved from <https://namu.wiki/w/2000%EB%85%84%20%EB%AC%B8%EC%A0%9C>

Big data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Big_data

Internet of things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of_things

Smartphone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martphone>

Wifi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Wi-Fi>

Y2K (*n.d.*).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Year_2000_problem

Y2K bug (*n.d.*). Retrieved from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Y2K-bug>

투 고 일 자: 2018년 04월 05일

심 사 일 자: 2018년 08월 06일

계재확정일자: 2018년 08월 07일

Abstract

The Internet and the Environment Power

Seung Il Park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Media & Culture, Sogang University

From the 1980s, mediating configuration has been constructed along with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computer, the wireless internet, the smart phone, th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mediating environment has become the background of our everyday life, so that we cannot even aware of its existence. If the everyday using of the wireless Internet and smartphones opened the potentiality of the intermediate environments, the cloud has created a transparent environment for automatically storing, processing and utilizing users' data. The Big Data produces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current tendency can be grasped, and the future can be predicted and controlled, based on accumulated data. The Internet of things is making an environment in which things can regulate and control contingency by themselves. Indeed, it is the everyday normalization of the mediating environment, and it is the inevitability of such an environment. The issue here is that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et itself is placed at the center of neoliberal government strategies, so that the automation of government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mediating environment has gained everyday pow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the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the mediating configuration that these various technologies produce as a effect of distinctive power and its associated system of rationality.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operating mechanism as 'environment power'. Contrary to the process of subjectification of

power, which operates within the interior of individual subject, the contemporary mediating environment surrounding daily life most effectively operates power by leading the thinking and behavior of general population who belong to the environment in a certain direction, through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environment. The fact that the place and role of the subject are gradually replaced by the automated data algorithm in the context of the 'being-in-mediation' tells that the actual operating mechanism of power leads to the change of the society in such form and direction.

KEYWORDS governmentality, environment power, being-in-mediation, Michel Foucault, the society of control, internet, wi-fi, smart phone, cloud computing, big data, internet of things